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02-04(3)

2015년 한·중·일 역학관계 대응 종합연구  
한·중·일의 국내 경제여건 및 현안,  
정책동향 비교분석

송영관 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2015년 한·중·일 역학관계 대응 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 협동연구총서<br>일련번호 | 연구보고서명                            | 연구기관        |
|----------------|-----------------------------------|-------------|
| 12-02-04(3)    | 한·중·일의 국내 경제여건 및<br>현안, 정책동향 비교분석 | 한국개발<br>연구원 |

2. 참여연구진

|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진                              |
|-----------|----------|------------------------------------|
| 한국개발연구원   | 송영관 연구위원 | 신석하 연구위원<br>윤희숙 연구위원<br>진양수 부연구위원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김규관 일본팀장<br>김부용 부연구위원<br>정지현 부연구위원 |



# 차 례

|                       |    |
|-----------------------|----|
| 국문요약 .....            | 1  |
| I. 서론 .....           | 5  |
| II. 한국 .....          | 13 |
| 1. 경제여건 .....         | 13 |
| 가. 거시경제 여건 .....      | 13 |
| 나. 산업 및 수출입 구조 .....  | 16 |
| 2. 경제 현안과 정책 동향 ..... | 21 |
| 가. 성장 잠재력 확충 .....    | 21 |
| 나.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  | 22 |
| 다. 시장경쟁 환경 .....      | 25 |
| 라. 복지 .....           | 28 |
| III. 중국 .....         | 33 |
| 1. 경제여건 .....         | 33 |
| 가. 거시경제 여건 .....      | 33 |
| 나. 산업 및 수출입 구조 .....  | 38 |
| 2. 경제 현안과 정책 동향 ..... | 40 |
| 가. 성장 잠재력 확충 .....    | 40 |
| 나.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  | 45 |
| 다. 시장경쟁 환경 .....      | 49 |

|                       |     |
|-----------------------|-----|
| 라. 복지 .....           | 52  |
| IV. 일본 .....          | 59  |
| 1. 경제여건 .....         | 59  |
| 가. 거시경제 여건 .....      | 59  |
| 나. 산업 및 수출입 구조 .....  | 63  |
| 2. 경제 현안과 정책 동향 ..... | 65  |
| 가. 성장 잠재력 확충 .....    | 65  |
| 나.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  | 69  |
| 다. 시장경쟁 환경 .....      | 73  |
| 라. 복지 .....           | 75  |
| V. 한·중·일 비교분석 .....   | 81  |
| 1. 경제여건 .....         | 81  |
| 가. 거시경제 여건 .....      | 81  |
| 나. 산업 및 수출입 구조 .....  | 84  |
| 2. 경제현황 .....         | 87  |
| 가. 성장 잠재력 확충 .....    | 87  |
| 나.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  | 89  |
| 다. 시장경쟁 환경 .....      | 91  |
| 라. 복지 .....           | 93  |
| VI. 결론 .....          | 99  |
| 참고문헌 .....            | 103 |
| Abstract .....        | 106 |

## 표 차례

|        |                                  |    |
|--------|----------------------------------|----|
| <표 1>  | 한국경제의 요소별 증가 추이 .....            | 21 |
| <표 2>  | 제조업과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 .....           | 22 |
| <표 3>  | 광업·제조업 전체 대비 독과점 고착산업의 성과 비교 ... | 27 |
| <표 4>  | 중국경제의 성장 기여도 .....               | 42 |
| <표 5>  | 지방 정부 부채 추이 .....                | 47 |
| <표 6>  | 지방 정부 부채의 만기 현황 .....            | 47 |
| <표 7>  | 중국 500대 기업에서의 국유기업의 위상 .....     | 51 |
| <표 8>  | 일본 GDP의 주요 수요항목의 추이 .....        | 61 |
| <표 9>  | 일본의 주요 산업별 GDP 비중 .....          | 64 |
| <표 10> | 일본의 주요 산업별 수출입구조 .....           | 65 |

## 그림 차례

|         |                                    |    |
|---------|------------------------------------|----|
| [그림 1]  | 금융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성장률 .....            | 14 |
| [그림 2]  | 금융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고용 상황 .....          | 15 |
| [그림 3]  | 금융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물가 .....             | 16 |
| [그림 4]  | 한국경제 산업구조 변화 .....                 | 17 |
| [그림 5]  | 한국 GDP에서 수출입 비중 변화 .....           | 18 |
| [그림6-1] | 한국의 주요 수출국 변화 .....                | 19 |
| [그림6-2] | 한국의 주요 수입국 변화 .....                | 19 |
| [그림7-1] | 한국의 주요 수출품 비중 변화 .....             | 20 |
| [그림7-2] | 한국의 주요 수입품 비중 변화 .....             | 20 |
| [그림 8]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                | 24 |
| [그림 9]  | 한국경제의 국가채무 추이 .....                | 25 |
| [그림 10] | 광업·제조업 CR3 추이 .....                | 26 |
| [그림 11] | 금융위기 전후 중국경제의 성장률 .....            | 34 |
| [그림 12] | 금융위기 전후 중국의 성장기여도 .....            | 36 |
| [그림 13] | 금융위기 전후 중국경제의 물가 .....             | 38 |
| [그림 14] | 중국의 산업별 명목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비중 .....     | 39 |
| [그림 15]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도시화 .....             | 44 |
| [그림 16] | 금융위기 전후 중국의 중국 금리와 지급준비율 .....     | 46 |
| [그림 17] | 금융위기 전후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률 .....         | 49 |
| [그림 18]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 .....       | 53 |
| [그림 19] | 금융위기 전후 중국의 도시 내 및 농촌 내 소득격차 ..... | 54 |

|         |                                   |    |
|---------|-----------------------------------|----|
| [그림 20] | 금융위기 전후 일본경제의 성장률 .....           | 60 |
| [그림 21] | 금융위기 전후 일본의 고용 상황 .....           | 62 |
| [그림 22] | 금융위기 전후 일본경제의 물가 .....            | 63 |
| [그림 23] | 일본의 장기 실질 GDP 성장률 .....           | 66 |
| [그림 24] | 일본의 GDP 갭 추이 .....                | 67 |
| [그림 25] | 일본의 1인당 실질 GDP성장의 요인분해 .....      | 68 |
| [그림 26] | 일본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중요소생산성 .....        | 69 |
| [그림 27] | 일본의 가계부채 추이 .....                 | 70 |
| [그림 28] | 일본의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추이 .....          | 71 |
| [그림 29] | 일본의 국가채무 순이자부담 비율 추이 .....        | 72 |
| [그림 30] | 일본 제조업의 시장집중도(CR3 및 HHI) 추이 ..... | 73 |
| [그림 31] | 일본의 사회지출 구성 내역(2007년) .....       | 77 |
| [그림 32] | 일본의 소득대체율(2007년) .....            | 77 |



## 연구 요약

한중일 경제여건 비교 분석하면 한중일 모두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2012년 2/4분기에 2.4%까지 성장률이 하락한 상황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위안화 평가 절상 등 대내외 원인으로 2011년 4/4분기부터 수출증가세가 10%대로 둔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률도 하락하였다. 일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치면서 장기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한중일 삼국의 산업 및 수출입 구조를 살펴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현상은 삼국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업 비중은 각각 70%와 80% 중반을 기록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1차 산업의 비중이 10% 상회해 한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수출에서 제조업 중간재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한국의 제조업 수출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과 2009년 각각 중국은 17%에서 30%로, 일본은 16%와 48%로 증가하였다.

한중일 경제현안 및 정책동향을 비교 분석하면 우선 일본과 한국은 경제성장률 저하에 직면하고 있다. 양 국 모두 고령화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하락이 문제이다.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는 한중일 삼국 모두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현재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지만 저금리 기조가 바뀌면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 시장경쟁 환경은 중국은 국유기업 독과점의 문제가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모두 제조업 내 시장집중도가 높으며, 독과점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복지 측면에서 한중일 삼국 모두 사회보장의 필요성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의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삼국 모두 복지 수준은 높지 않고, 일본도 수혜율이 낮은 저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 I. 서론

2007년 4월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의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로 확대되었다. 재정위기는 그 성격상 단기일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선진국이었던 유럽과 미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신 신흥국이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상하는 신흥국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경제는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 이후 1986년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가입 신청, 그리고 2001년 11월 10일 드디어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을 함으로 세계경제질서에 굳건히 편입되었다. 개혁·개방 이후의 30여 년간 중국경제는 연평균 10%대의 고속성장을 이루었고,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국으로 올라섰다.

한국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반 정도가 해외시장에서 창출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변화는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특히 한국과 긴밀한 경제·외교·문화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현안을 전망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장에서는 2015년 한·중·일 삼국의 경제현안을 전망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시점을 기점으로 삼국의 국내 경제여건 및 현안, 정책동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우선 한·중·일 삼국의 국내 경제여건을 거시경제 측면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비교한다. 그리고 삼국의 현안을 성장률·거시경제 안정성·시장경쟁·복지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한·중·일 삼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은 특히 환율변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시장경쟁과 복지는 일국의 성장 전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 담길 한·중·일 삼국 경제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한국경제는 금융위기의 일차적인 충격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벗어났으나, 유럽 및 미국 등의 부채문제로 인해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완전히 정상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점차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인구 고령화 등으로 향후에는 성장률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소기업 생산성의 개선 속도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시행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의 많은 산업 또는 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 간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독과점구조 고착화 산업을 보면 해외개방도 및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이미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독과점 산업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이 대외적 경쟁압력을 덜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혁신을 통한 경쟁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도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되지 않은 사례로 꼽혀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빈곤

심화와 소득분배악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0년 2/4분기를 시작으로 다시 성장 속도가 느려졌으며 2012년 들어서는 7-8%대로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경제를 견인하는 3두 마차 중 수출이 큰 영향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2008년 하반기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크게 인하하고 4조 위안의 대규모 재정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빠르게 경기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이는 과잉 유동성으로 이어져 2009년 4분기부터 다시 플러스로 전환된 물가상승률은 2010년 4분기 4.7%로 급등하였으며, 이러한 고물가는 1년간 지속되었다. 또한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의 증가는 지방 정부의 부채 증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비효율과 부패의 대명사로 꼽힌다. 개혁·개방 이전 80%를 웃돌던 중국 국유기업의 비중은 이후 몇 번의 개혁을 통해 40%대까지 그 비중이 낮아졌다. 하지만 국유기업은 비국유기업에 비해 부가가치 및 이윤 증가율이 낮은 등 국유기업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개혁·개방 이후의 30여 년간 중국경제는 연평균 10%대의 고속성장을 구가하였으나, 동시에 사회구성원 간 소득격차 또한 크게 확대되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에서 소득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의 하나다. 2008년 이후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사회보험법과 같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들을 잇달아 시행하며 노동법률 환경을 친노동자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소득분배 개선과 무관하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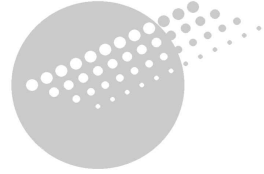
일본경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6%의 실질성장을 기록함으로써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지속된 저성장 기조를 벗어난 듯 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치면서, 장기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

고 있다. 2008년 2사분기부터 가시화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엔고가 겹치면서 전례 없는 수출급감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기업부문의 생산 및 설비투자 급감, 고용악화를 통해 가계부문의 소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의 장기적 경제성장률 저하는 1990년대의 버블붕괴나 그 이후의 금융·재정정책의 실패 같은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수요측면에서의 만성적인 수요 부족과 공급측면에서의 생산성 하락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일본경제의 노동생산성 하락, 그 중에서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하락은 장기불황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거시경제 안정성 관점에서 일본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불안이다. OECD는 2012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19.1%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 포르투갈보다 높은 수준이고 독일, 프랑스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극단적인 재정과탄을 모면할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저금리 기조에 있다. 일본경제에서 제조업 부문의 시장경쟁 실패를 보면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 이러한 독과점 현상이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관련 정부지출이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둘째, 일본정부의 사회보장관련 지출은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자관련 지출비중이 매우 높아 저출산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셋째, 고령자에 대한 국가부담은 높지만 실제 고령자 1인당 연금수급액은 그다지 높지 않아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가 수혜율은 낮은 저복지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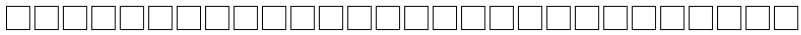
본 장의 집필진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거시경제 여건과 성장 잠재력 확충 및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부문은 KDI 신석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한국의 시장경쟁 환경과 복지 부문은 각각 KDI의 진양수 부연구위원과 윤희숙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일본 부문은 KIEP의 김규관 일본팀장이 작성을 하였고, 중국 부문

은 KIEP 정지현 부연구위원과 김부용 부연구위원이 함께 작성을 하였다. 본 연구의 책임자는 KDI 송영관 연구위원이 맡아 기획을 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작성하였다.





## Ⅱ. 한 국



- 1. 경제여건
- 2. 경제현안과 정책동향



## II. 한국

### 1. 경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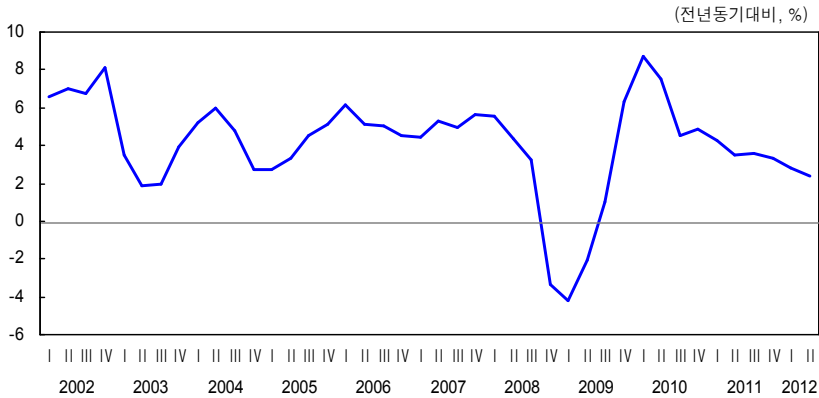
#### 가. 거시경제 여건

한국경제는 금융위기의 일차적인 충격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벗어났으나, 유럽 및 미국 등의 부채문제로 인해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완전히 정상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율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직후 발생한 세계 금융시장의 공황으로 인해 2008년 4/4분기에는 -4% 이하로 성장률이 급락하였다. 그러나 세계 각국 정부의 협조 아래 시행된 경기부양조치들로 인해 2009년 2/4분기부터 점차 회복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6.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경기부양조치의 효과가 줄어든 가운데 금융위기 과정 중에 축적된 높은 부채문제가 지속되면서 대외 경제여건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며 2012년 2/4분기에 2.4%까지 성장률이 하락한 상황이다.

[그림 1] 금융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성장률



자료: 한진희 · 신석하(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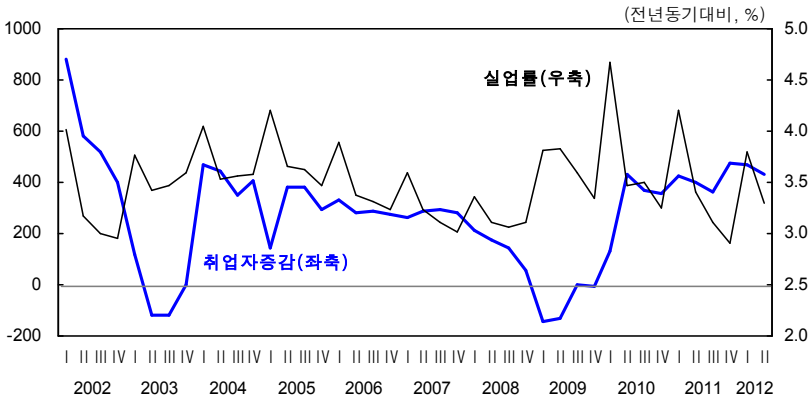
금융위기가 한국경제보다는 선진국 경제에서 기인하였으므로, 한국경제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 받지 않았다. 1997년의 외환위기시에는 성장률에 비해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던 반면, 이번 금융위기에는 성장률 하락에 상응하는 정도의 변화만을 나타내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가 크게 부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투자가 소비보다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4대강 사업 등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투자로 인해 2009년 3.4%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3.7%, -5.0% 감소하였다. 건설투자의 부진은 사회간접자본이 그동안 많이 축적되어 투자수요가 줄어들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2009년에 -9.8% 감소한 후 2010년에는 25.7% 급증하였다. 이후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설비투자 증가세도 점차 둔화되어 2012년 2/4분기에는 -1%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의 속성상 수출이 수요요인 중 가장 크게 영향 받았다. 금융위기 이전 2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기록하던 수출은 2008년 11월에는 -22.3%로 급락하였다.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한국경제의 수출도 2010년에는 28.3% 증가하였으나,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증가세도 다시 둔화되어 2012년 2/4분기에는 -1.6% 감소로 반전되었다.

금융위기의 영향이 수출 및 제조업에 집중되고 소비 및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작게 영향 받음에 따라 고용시장의 조정도 크지 않았다. 위기 이전 3%대 초반이던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4%대 중반까지 상승하고 취업자도 15만 명 내외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 이후 실업률이 다시 3%대로 낮아지고 취업자도 40만 명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자의 높은 증가세는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확대에 의한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고용시장은 성장세 둔화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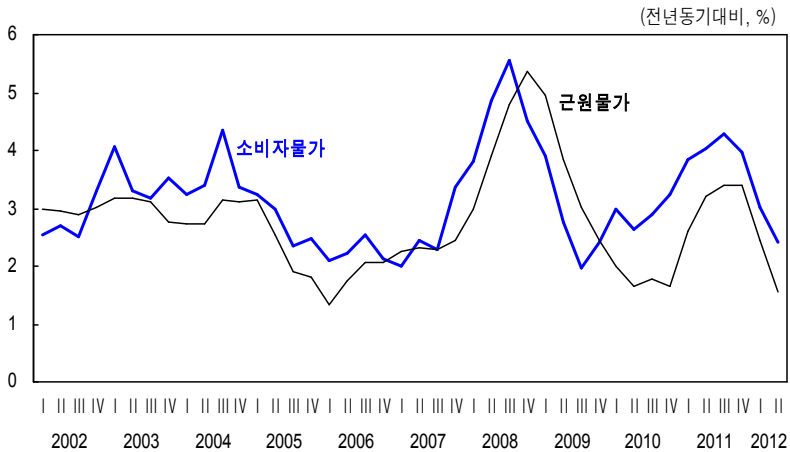
[그림 2] 금융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고용 상황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2012년 8월).

물가는 금융위기 이후 하향 안정되었으나, 정책금리 정상화가 지연되며 2011년에는 다시 높아졌다가, 최근에는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세도 진정되는 모습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3/4분기에는 신흥시장 수요 증가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5%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급락하며 물가도 낮아져 2009년 2/4분기에는 2.0%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크게 인하된 정책금리가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정상화되지 않아, 2011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까지 높아졌다. 최근에는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국제유가 및 수요압력이 낮아짐에 따라 2012년 2/4분기에는 2.4%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

[그림 3] 금융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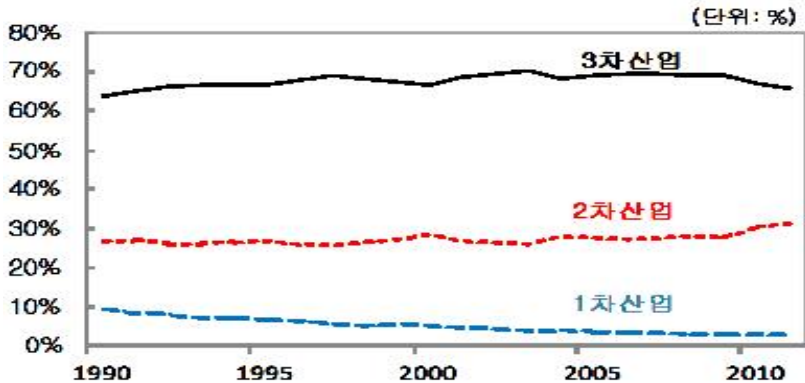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2012년 8월).

## 나. 산업 및 수출입 구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은 제조업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 산업의 GDP 비중을 한국은

행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1차 산업 비중이 2000년 4.6%에서 2011년 2.7%로 감소하였고, 제조업 비중은 2000년 28.6%에서 2007년 27.5%로 감소하다 2011년 31.4%로 증가하였다. 한편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건설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0년 66.7%에서 2007년 69.1%로 증가하다 2011년 66%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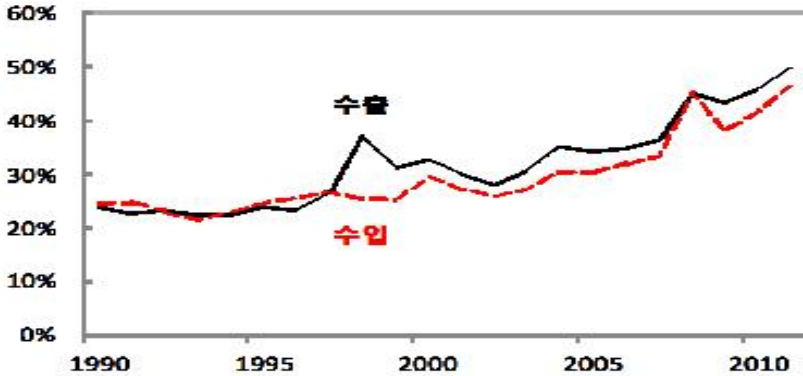
[그림 4] 한국경제 산업구조 변화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원계열, 명목), <http://ecos.bok.or.kr>)

한국의 수출액을 무역협회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2000년 1천 7백억불 수준에서 2011년 5천 6백억불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5% 수준에서 2011년에는 50% 수준에 다다랐다. 수입액 또한 2000년 1천 6백억불 수준에서 2011년 5천 2백억불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GDP에서의 수입 비중 또한 수출 비중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5] 한국 GDP에서 수출입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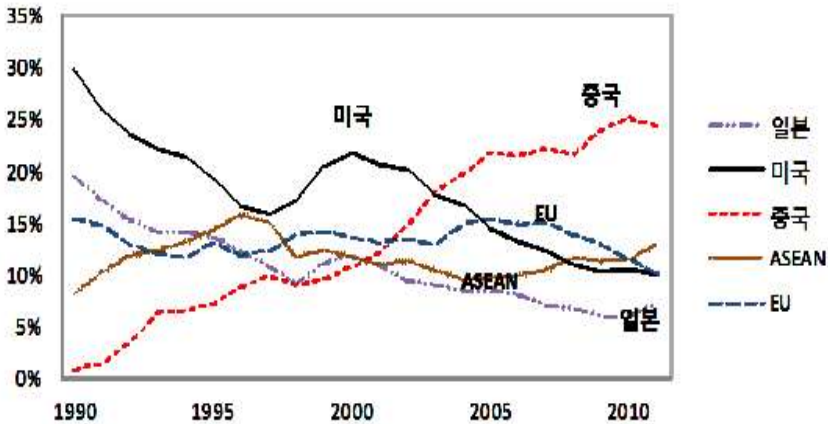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원계열, 명목), <http://ecos.bok.or.kr>)

수출 상대국 중 중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현재 전체 수출의 1/4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1990년대만 해도 한국 수출의 주요 상대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신흥국인 ASEAN으로의 수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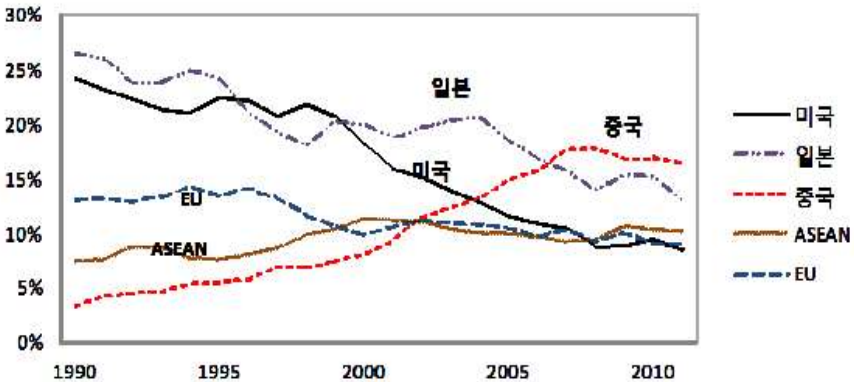
한국의 주요 수입국도 전통적 수입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고, 대신 중국이 한국 제 1의 수입국으로 등장하였다. 중국제품의 수입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금융위기 이후 주춤한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제 1위의 수입국 위치에 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중국에 그 자리를 내준 상황이다.

[그림 6-1] 한국의 주요 수출국 변화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국가별 수출입, 경제권별 수출입, <http://stat.kita.net>)

[그림 6-2] 한국의 주요 수입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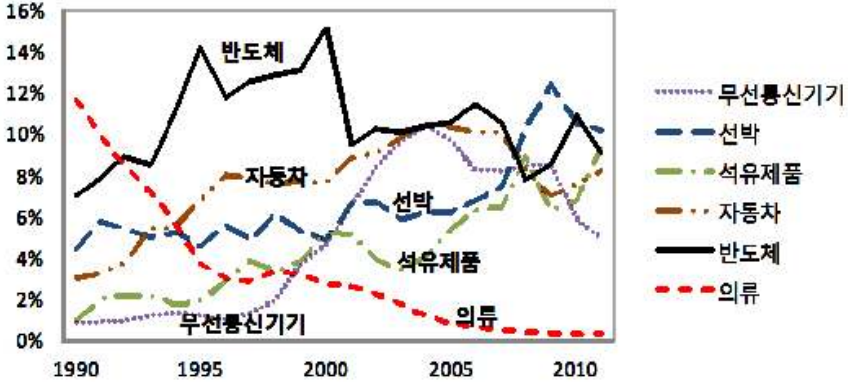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국가별 수출입, 경제권별 수출입, <http://stat.kita.net>)

한국의 주요 수출품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1990년대 급속히 증가했던 반도체의 비중이 2000년대에 들어 감소하고 있다. 대신 자동차와 선박, 그리고 석유제품의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다.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그 비중이 10%까지 증가하였다 감소추세에 있다. 전통적 수출품목이었던 의류의 경우 1990년

대부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주력 수출품목에서는 멀리 비켜서 있는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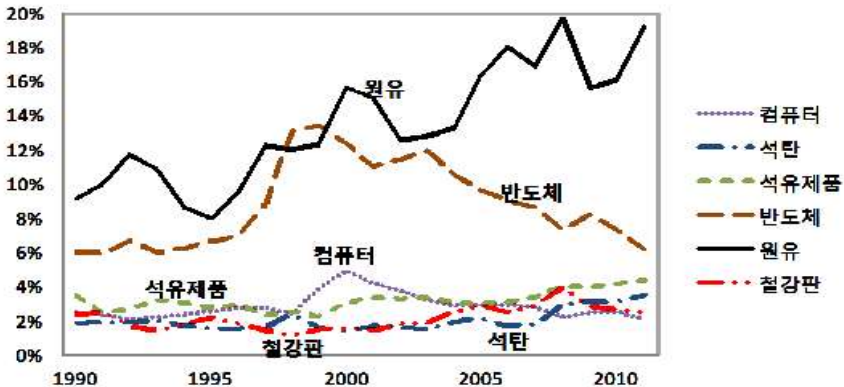
[그림 7-1] 한국의 주요 수출품 비중 변화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품목별 수출입 (MTI 기준), <http://stat.kita.net>)

한국의 주요 수입품의 변화를 살펴보면 에너지와 원자재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원유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원유가격의 상승과 관련이 있다. 중간재 역할을 하는 석유제품의 비중이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고 반도체 수입은 1990년대 말을 정점으로 하여 하락하고 있다.

[그림 7-2] 한국의 주요 수입품 비중 변화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품목별 수출입 (MTI 기준), <http://stat.kita.net>)

## 2. 경제 현안과 정책 동향

### 가. 성장 잠재력 확충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점차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인구 고령화 등으로 향후에는 성장률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노동 및 자본 등 요소축적을 통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을 통해 생산성도 용이하게 개선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과잉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자본축적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출산율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인구증가 속도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총요소생산성의 개선 속도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이 강화되며 생산성 증가세가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과거와 같이 농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의 이동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기도 어려우며 선진국의 모방을 통한 제도개선 여지도 줄어든 상황이다.

〈표 1〉 한국경제의 요소별 증가 추이

(단위: 연간증가율, %)

| 기 간     | GDP | 자 본  | 노 동 | 총요소생산성 |
|---------|-----|------|-----|--------|
| 1981~85 | 7.5 | 9.5  | 2.7 | 2.5    |
| 1986~90 | 9.2 | 12.3 | 4.0 | 2.3    |
| 1991~95 | 7.5 | 11.6 | 4.2 | 0.8    |
| 1996~00 | 4.3 | 6.6  | 1.6 | 1.0    |
| 2001~05 | 4.5 | 4.7  | 1.3 | 2.0    |

자료: 한진희 · 신석하(2008)

2020~30년에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 추세가 현저해져 성장률이 2%대로 낮아지고, 2030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될 뿐 아니라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며, 고령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으로 저축 여력이 감소하여 자본 축적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정부는 인구고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출산을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표 2〉 제조업과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

(단위: 연간증가율, %)

| 기 간     | 제조업 | 서비스업 |
|---------|-----|------|
| 1981~85 | 5.1 | 0.4  |
| 1986~90 | 1.5 | 1.1  |
| 1991~95 | 3.7 | -1.6 |
| 1996~00 | 5.8 | -1.3 |
| 2001~05 | 4.6 | 0.4  |

자료: 한진희·신석하(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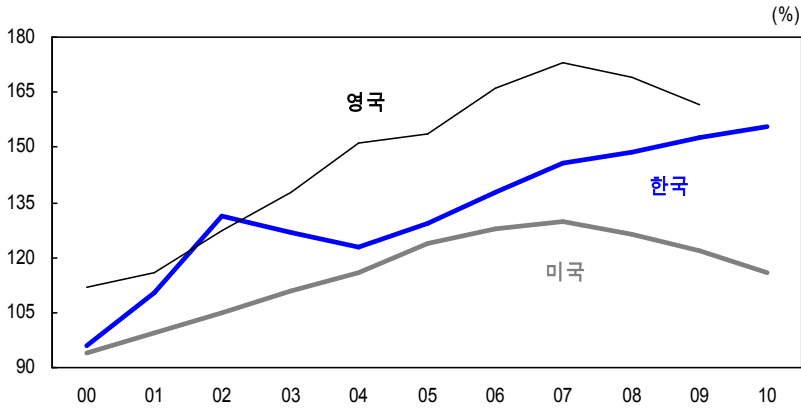
## 나.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즉 거시경제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과 아울러 단기적으로 잠재성장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운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가계,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과도한 부채를 축적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 기울여 부정적인 충격에 대한 완충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화당국은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정책금리를 5%에서 빠르게 인하하여 2009년 2월에는 2.0%까지 낮추었으며, 재정정책도 일자리 대책 등 위기대응을 위해 2008년 GDP 대비 1.1%, 2009년 3.7% 수준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통화 및 재정정책의 대응은 규모와 적시성 측면에서 적절하였다는 대내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충격으로부터 벗어난 2010년 이후에도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않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사실상 상회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도 지속되었던 것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150%를 상회하여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부채조정이 진행되어 소득대비 부채 비율이 점차 하락한 반면, 한국의 경우 최근에는 증가세가 다소 진정되는 정도이다. 또한 2007년 이전에는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은행에 비해 비은행금융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이 부족하며, 비은행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가구들의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계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들은 아직까지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향후 가계부채의 적절한 관리가 전체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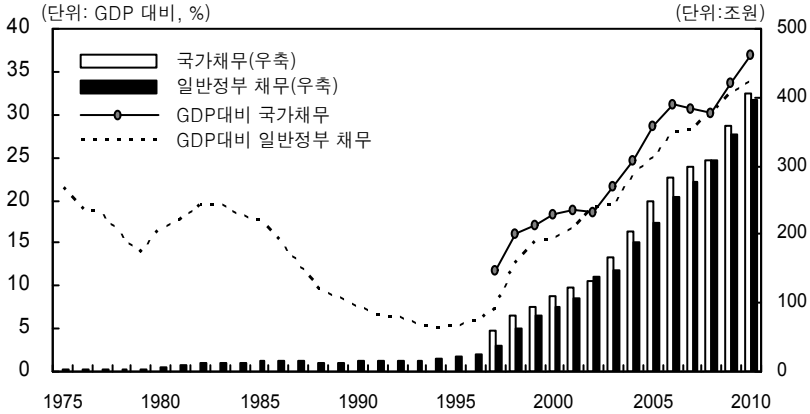
[그림 8]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자료: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관련 자료 참조.

한편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시행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는 금융위기 이후 30%대 중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 대비 60~90%를 상회하면 과다부채로 인식된다. 그러나 신흥시장국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40%를 과다부채의 기준점으로 적용받기도 한다. 한국정부도 재정건전성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3년에 관리대상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점차 하락시킨다는 목표아래 2012~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 중이다.

[그림 9] 한국경제의 국가채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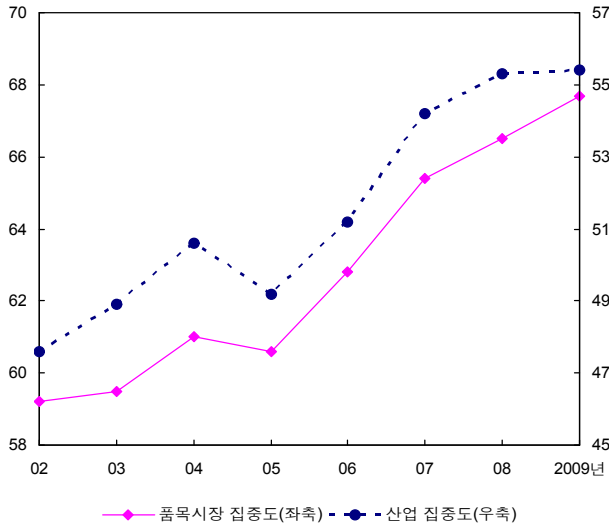


주: 일반정부 채무는 2001년까지 1968 SNA 기준, 20002년 이후 1993 SNA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다. 시장경쟁 환경

최근 국내 경제의 많은 산업 또는 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 간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상적 일면으로 파악할 때, 이러한 미시적 경쟁의 부족 또는 퇴조는 다양한 산업들에서 독과점화가 점차 확산되거나 고착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0] 광업·제조업 CR3 추이



자료: 통계청.

실제로, 광업·제조업 부문 출하액을 기준으로 국내 여러 산업들의 평균적 독과점 정도를 보면, 2002년 47.6% 수준이었던 CR3가 2009년에는 55.4%까지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허핀달 지수(HHI)도 1,600에서 1,820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sup>1)</sup> 또한, 2009년을 기준으로 독과점구조 고착산업(과거 5년 동안 연속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sup>2)</sup>가 존재하는 산업)의 수는 43개에 달하며, 이들 산업의 CR3 및 HHI는 각각 93.6% 및 5,60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3)</sup>

- 1) CR<sub>k</sub>는 어느 한 산업 내 상위 k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을 의미한다. HHI는 한 시장의 집중 수준, 즉 독과점 수준을 나타내는 데 널리 쓰이는 지표의 하나이다.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CR1이 50% 이상이거나 CR3가 75%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자(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 3) 더욱 최근 들어서는 일부 대기업들이 신규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시키면서 과거 다수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활동하던 시장에서도 집중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년간 18개 기업집단 소속 30개사가 중소기업 영위 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공정위 보도자료,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다른 한편, 시장경쟁의 부족은 기존 독과점 사업자들의 경쟁제한적 행태의 확산, 즉 경쟁질서의 퇴조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정유, 설탕, 커피, 항공 등 다양한 독과점 산업에서 사업자들 간 담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또한 독과점 구조가 이미 형성된 산업에서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국내 대형항공사들이 지배력을 남용하여 저가항공사의 국내·국제선 항공여객 시장에서의 진입을 방해한 사례<sup>4)</sup>라든지 종합유선방송사들이 담합하여 IPTV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진입을 방해한 사례<sup>5)</sup>가 그 예이다. 대형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신과 거래를 하는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시장에 신규 진입한 경쟁 오픈마켓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진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킨 사례<sup>6)</sup>도 있다.

〈표 3〉 광업·제조업 전체 대비 독과점 고착산업의 성과 비교

| 연도        | 해외 개방도(%) |      | R&D 비율(%) |      |
|-----------|-----------|------|-----------|------|
|           | 2008      | 2009 | 2008      | 2009 |
| 광업·제조업 전체 | 30.2      | 28.3 | 2.0       | 2.4  |
| 독과점 고착 산업 | 27.4      | 26.5 | 1.7       | 1.8  |

주: 해외개방도는 총출하액 대비 수출입액의 비중을 의미.

자료: 이재형(2010, 2011).

이러한 시장경쟁의 부족 또는 퇴조는 일차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후생을 잠식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변동현황 정보공개', 2012년 2월)

- 4) 공정위 의결, 「(주)대한항공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및 「아시아나항공(주)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건」, 2010년.
- 5) 공정위 의결, 「5개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11년.
- 6) 공정위 의결, 「(주)이베이마켓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2010년.

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내 독과점구조 고착화 산업을 보면 해외개방도 및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이미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독과점 산업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이 대외적 경쟁압력을 덜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혁신을 통한 경쟁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 라. 복지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도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되지 않은 사례로 꼽혀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빈곤심화와 소득분배악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글로벌경제화와 탈공업화 속에서 임금격차와 저임금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한국은 급속한 공업화와 탈공업화가 곧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구조적 변화의 파장이 빈곤심화로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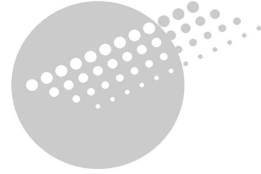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1992년 0.245에서 2009년 0.311로 상승했고, 상대빈곤율은 같은 기간 중 6.5%에서 15.2%로 상승했다. 최근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은 저소득층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단기적 현상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지속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의 절대빈곤율은 10% 내외로 추정되며, 빈곤이 장기화되고 만성화되는 추세 속에서 1996년 이후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은 소득하위계층일수록 급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절대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회복지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노력은 그간 크게 확대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는 동안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도화된 정책적 노력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2000), 기초노령연금(2008), 근로장려세제(2008)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제도와 프로그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 (effective) 보호범위가 좁고 수혜율이 낮아 복지사각지대가 넓은 것은 한국 복지제도의 특성이자 한계이다.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구가 약 410만 명 수준이며 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70%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여 자립을 돕는 한편, 다가오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출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복지부문의 큰 과제이다.





# Ⅲ. 중 국



- 1. 경제여건
- 2. 경제현안과 정책동향



## Ⅲ. 중국

### 1. 경제여건

#### 가. 거시경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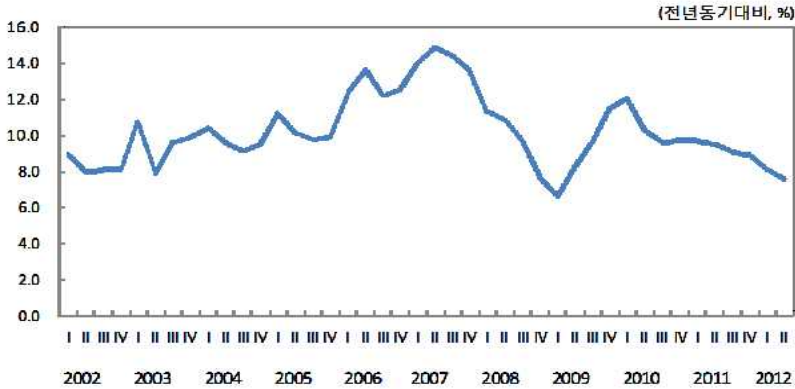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0년 2/4분기를 시작으로 다시 성장 속도가 느려졌으며 2012년 들어서는 7-8%대로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중국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수출 및 투자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여 1978-2008년간 연평균 10%의 고성장을 달성하였다. 특히 2002년 WTO 가입 이후 수출이 확대되면서 2002-2008년간 성장률은 무려 11%에 달했다. 2008년 9월의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경제는 2008년 4/4분기 7.6%로 성장률이 급락하였고, 2009년 1/4분기에는 6.6%로 진일보 하락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4조 위안 경기 부양조치로 2009년 2/4분기부터 점차 회복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도 9.2%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10.4%로 다시 두 자릿수 성장세를 구가하며 세계경기회복을 주도하였다. 2010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유럽발 재정위기를 비롯한 세계경기의 침체 등 요인으

로 중국경제는 2010년 2/4분기의 10.3%를 정점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다시 9.2%로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여기에 경기부양조치의 효과가 줄어들면서 2012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1/4분기 8.1%에 이어 2/4분기에는 7.6%를 기록, 2009년 1/4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8% 이하를 기록하였다.

[그림 11] 금융위기 전후 중국경제의 성장률



자료: CEIC Database(2012년 9월 검색).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경제를 견인하는 3대 수출품 중 수출이 큰 영향을 받았다. 2002년 이후 20-30%대를 기록하던 수출증가율이 2009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20%대로 급락하였다. 이후 세계경제가 차츰 회복되면서 중국의 수출도 2009년의 -16.0% 증가에서 2010년에는 31.3%, 2011년에는 20.3% 증가하며 다시 중국경제의 회복을 이끌었다. 그러나 유럽,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위안화 평가 절상 등 대내외 원인으로 2011년 4/4분기부터 수출증가세가 10%대로 둔화되었으며, 2012년 2/4분기에도 수출증가율은 10.5%에 그쳤다.

수입도 수출과 비슷한 패턴으로 2009년 4/4분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들어 10%대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의 수출입 구조에는 변화가 생겨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였다(2012년 2/4분기 제외). 이에 따라 무역수지(순수출: 수출-수입)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2007년의 2.6%p에서 2010년 0.4%p, 2011년에는 -0.4%p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대외교역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대외교역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불균형 시정 요구 및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의 의존도 감소 필요성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sup>7)</sup>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고정자산투자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인프라와 부동산 건설, 민생개선 등에 총 4조 위안을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GDP 성장률에 대한 투자 기여도는 2008년의 4.5%p에서 2011년에는 4.9%p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무려 8.1%p에 달해 진정한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2009년 30.0%를 기록했던 투자증가율은 2010년부터 다소 감소하여<sup>8)</sup> 2012년 2/4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19.9%로 동년 1/4분기 20.9%에 비해 진일보 둔화되었다. 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1/4분기 2.7%p, 2/4분기 3.9%p로 소비 기여도(각각 6.2%p와 4.5%p)보다 다소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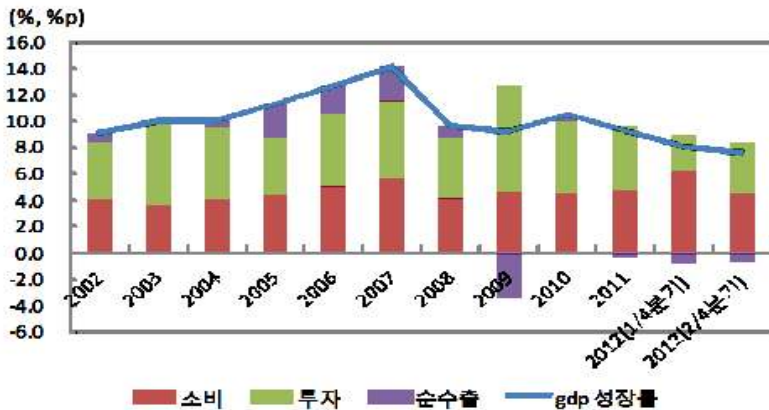
투자증가율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세가 가시화되자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2012년 들어 지방의 투자 프로젝트들을 잇달아 승인하며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7) 2012년 2월 중국 상무부 등 10개 부처에서 「무역발전방식 전환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關於加快轉變外貿發展方式的指導意見)」을 발표하였다.

8) 2010년 투자증가율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2009년에 신규 건설항목이 비교적 많고 투자규모도 비교적 컸기 때문이다. 4조 위안의 투자 사업에 포함된 프로젝트들은 2010년 말 대부분 종료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소비를 부양하여 위기에 대응하고자 자동차 구매세 인하를 비롯한 감세 조치, 가전하향(家電下鄉)<sup>9)</sup>, 이구환신(以舊換新)<sup>10)</sup> 등의 다양한 소비 진작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조치에도 위축된 소비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2009년 소비재 소매총액은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하여 금융위기 전인 2007년의 18.2%, 2008년의 22.7%보다 다소 낮았으며, 2012년 상반기에는 14.4% 증가하여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007년 5.6%p에서 2011년 4.7%p로 투자에 못 미쳐(2007년과 2011년에 각각 6.0%p와 4.9%p) 여전히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양상이다. 2012년 들어 소비의 기여도가 투자 기여도를 앞지르고 있긴 하지만 이는 소비가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투자가 위축된 결과이며, 중국 정부가 다시 인프라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어 당분간 투자 주도의 경제성장 방식은 여전할 전망이다.

[그림 12] 금융위기 전후 중국의 성장기여도



자료: CEIC Database(2012년 9월 검색).

- 9) 가전하향이란 농촌지역의 가전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민을 대상으로 컬러TV, 휴대폰, 컴퓨터, 전기자동차 등 구매 시 구매가격의 13%를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가리킨다. 2009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2012년 말 완료된다.
- 10) 이구환신이란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중고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 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2009년 5월부터 2011년 말까지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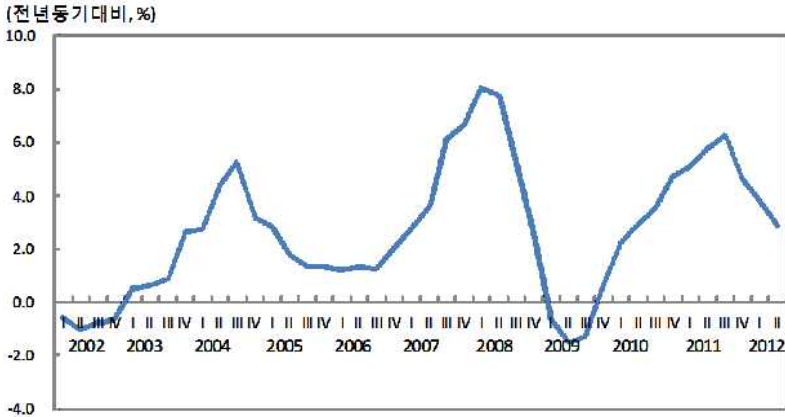
2012년 들어 경제성장세가 계속하여 둔화되자 중국 정부는 6월부터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1년간 265억 위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통화공급 확대 정책으로 물가는 2010년 4/4분기부터 치솟기 시작하여 1년간 고물가가 지속되다가, 2010과 2011년의 긴축통화정책으로 2012년 들어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신흥개도국의 수요 확대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6%에 육박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하락하며 2009년에는 -0.7%로 하락하였다. 2008년 하반기 중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은행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여러 차례 인하하고, 4조 위안에 달하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였는데, 이는 결국 과잉 유동성을 초래해 2010년 4/4분기 물가상승률은 4.7%로 치솟았으며 고물가는 1년간 지속되었다. 2011년에는 돼지고기를 비롯한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물가상승률은 5.4%까지 높아졌다. 중국 정부는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2010년과 2011년에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긴축정책을 시행하였고, 이에 물가상승률은 2012년 1/4분기 3.8%, 2/4분기 2.9%로 차츰 진정되었다.

한편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자 중국 정부는 재차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담을 안고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그림 13] 금융위기 전후 중국경제의 물가



자료: CEIC Database(2012년 9월 검색).

실업률은 2008년 4.1%였으며 이후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소폭 상승하여 4.3%에 달했으나 2011년부터는 다시 4.1%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던 도시 노동력시장은 2010년 3분기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인력난에 직면하였다. 2012년 2/4분기 도시 노동력시장의 구인/구직 비율은 1.05였다.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대졸 이상의 고급인력은 공급과잉 상태인데 반해, 고졸 이하 생산인력은 공급이 감소하며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동부 연해지역 제조업은 비싼 생계비, 생산직 기피 현상 등 원인으로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 나. 산업 및 수출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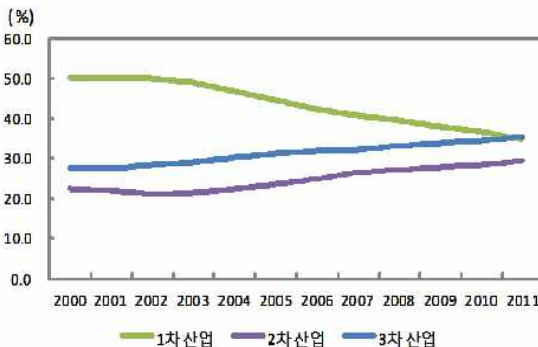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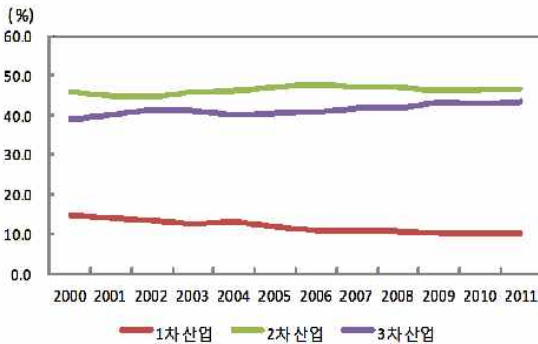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 산업 부가가치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15.1%에서 2011년에는 10.0%로 하락하였다. 2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의 45.9%에서 2006년에는 47.9%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다소 줄어들어 2011년에는 46.6%를 차지하였다. 3차 산업의 비중은 2005년 39.0%에서 43.3%로 1차 산업 비중의 하락을 상쇄시키고 있다.

고용의 산업구조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차 산업의 취업자 수 비중은 2000년의 50%에서 2011년에는 34.8%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2차 산업의 취업자 수 비중은 같은 기간 22.5%에서 29.5%로, 3차 산업은 27.5%에서 35.7%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아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3차 산업은 낙후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림 14] 중국의 산업별 명목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비중



자료: 國家統計局(2012).

세부산업으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임업, 목축업, 어업을 포함)이 10.3%로 가장 컸고, 도매업(7.1%)과 건설업(6.6%)이 그 뒤를 따랐다. 제조업 중에서는 기초금속(5.2%)과 전기·전자(4.7%), 식료품(3.8%)의 비중이 높았다.

산업별 수출입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의 수출은 주로 전기·전자, 섬유산업, 기계류 등의 제조업에 집중되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34.1%(2009년 기준)로 월등히 높았다. 한편 섬유제품 수출은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기계류 수출은 소폭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 역시 전기·전자, 고무·플라스틱, 기계류 등의 제조업에 집중되었으며, 광업에 대한 수입이 2009년 기준 16.0%로 전기·전자(27.8%)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전기·전자 등 업종의 수입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인 데 반해 광업 수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가 설명하는 바는, 중국의 교역구조가 한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로부터 부품·소재를 공급받은 후 자국의 낮은 생산원가를 활용하여 이를 가공 또는 조립한 다음 미국, 유럽 등 제3국으로 최종재를 수출하는 형식이라는 것과, 최근 중국의 부품·소재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도 설명한다.

## 2. 경제 현안과 정책 동향

### 가. 성장 잠재력 확충

중국경제는 2000년대 들어서도 10% 안팎의 고성장을 구가하

여 왔으나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며 2012년에는 7-8%대로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2012년 들어 중국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가장 큰 요인은 장기화된 세계경기 침체로 2011년 하반기부터 국외수요 부진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소비활성화를 위한 가전하향 등 정책에도 소비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대규모 재정자금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던 고정자산투자도 2010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최근의 성장률 둔화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한 조짐이라는 일견도 있다. 그동안 노동과 자본 축적을 통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면 이제는 이러한 요소 축적을 통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자본투입 측면에서 보면 노령화로 인한 부양율의 상승, 주민 소비의 증가로 그동안의 높은 저축률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sup>11)</sup> 또한 그동안의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과정에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설비, 투자, 인프라 등 경제 내 필요자본의 축적이 상당부분 이루어져 신규투자의 한계생산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배기환, 2011).

노동투입 측면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성장도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UN에서는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농촌 잉여노동력의 도시로의 유입이 감소하고 교육수준이 향상되며 노동력 수급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바, 저임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및 대졸 실업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 측면에서도 생산성이 낮은 부문(1차 산업)에서

---

11) 2011년 중국의 노령인구 비중은 9.1%로 고령화 사회 국제기준인 7%를 넘어섰으며, 부양률(1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인구가 15-64세의 생산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4%에 달했다.

높은 부문(2차 산업)으로의 노동 이전 규모 및 속도가 감소하고, 기술 혁신 속도가 둔화되며, 시장 개혁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면서 TFP가 과거의 약 3% 수준에서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王一鳴, 2012). OECD, WB 등 국제기구에서는 2010년을 전후한 중국의 지속 가능한 잠재성장률 수준을 평균적으로 8% 대로 추정하였다(배상인, 2012).

〈표 4〉 중국경제의 성장 기여도

(단위: %, %p)

| 연도        | GDP  | 자본  | 노동  | 총요소 생산성 |
|-----------|------|-----|-----|---------|
| 1978-2007 | 9.8  | 6.3 | 0.9 | 2.6     |
| 1978-1985 | 9.8  | 5.1 | 1.2 | 3.5     |
| 1985-1989 | 7.9  | 5.5 | 2.2 | 0.2     |
| 1990-1997 | 11.5 | 6.8 | 0.4 | 4.3     |
| 1997-2000 | 8.0  | 6.5 | 0.4 | 1.0     |
| 2000-2007 | 10.4 | 7.5 | 0.4 | 2.5     |

주: 노동 및 자본과 같은 물리적 투입요소 증가 이외에 기술 발전, 인적자본 향상 등 성장률을 높이는 제 요인을 포함함.  
 자료: 李善同·何建基(2010); 배기환(2011)에서 재인용.

중국 정부도 과거와 같은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기간 목표 경제성장률을 7%로 하향 설정하였으며, 성장 동력을 수출과 투자 중심에서 소비 위주로 바꾸기 위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을 인상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며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소비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향후 신용소비를 발전시킬 전망이다. 투자 측면에서는 민간이 철도, 시정, 에너지, 통신, 교육, 의료 등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격려하며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측면에서는 대외불균형을 조정하여 수출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여 안정적으로 증가를 이루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현재처럼 수출이 막히고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다시 투자라는

카드를 내들고 있다. 7%대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했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인 8% 이하로 경제성장률이 내려가는 것은 아직 불안한 중국 정부다.

또한 중국정부는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주력하여 전통적인 제조업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전략적 신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sup>12)</sup>을 성공적으로 뛰어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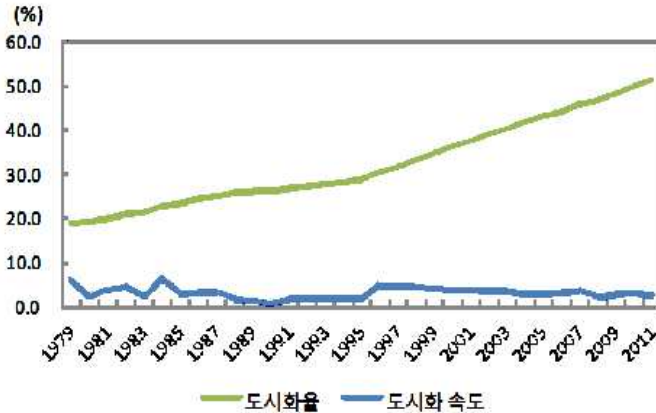
12차 5개년 계획에 나타난 서비스업의 GDP 비중 목표치는 2010년의 43%에서 2015년 47%로의 증가이다. 중국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7대 전략적 신산업을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이며, 2015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8%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내수 확대의 또 다른 카드는 도시화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1979년의 19.0%에서 2011년에는 51.3%로 눈에 띄게 제고되었으며, 매년 약 3.2%p 상승하였다. 이 같은 도시화 진전은 중국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마샤오허(馬曉河) 부원장에 따르면 1978-2010년 도시화율이 1%p 제고할 때마다 1978년 불변가격 기준의 1인당 GDP는 124.5위안, 3차 산업 취업자 수는 663만 8,400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12) 개도국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진국(대략 1인당 GDP 4,000-10,000달러 수준)까지는 비교적 쉽게 도달하나, 그간의 고속 성장과정에서 배태된 모순 및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 중진국에서 성장이 정체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림 15]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도시화



자료: CEIC Database(2012년 9월 검색).

그러나 중국의 도시화 진전을 가로막는 제도와 정책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바로 도농이원체제이다. 이러한 제도로 농민공들은 취업, 교육, 보건, 의료, 양로, 주택보장 등 많은 부분에서 도시민들과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농민공의 도시 정착을 배척하고 도시화를 억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국 정부는 농민공의 도시호구 취득을 도시화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해당 도시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농민공에 한해 도시호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호구 취득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는 교육 및 훈련, 주택보장 등 분야의 사회공공서비스를 누리게 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파급효과가 있는 도시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발전시켜 도시화를 촉진하며 교통, 통신, 전기·가스공급, 오수 처리 등의 기초 인프라 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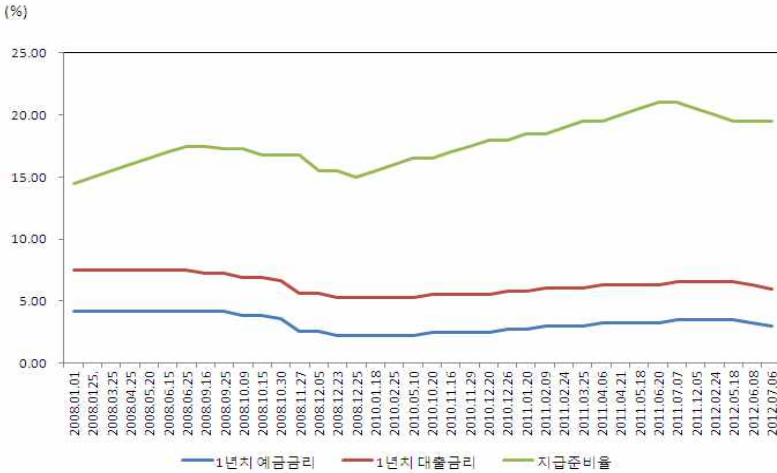
## 나.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이번 금융위기로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 정부가 과도한 부채를 지지 않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2008년 하반기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크게 인하하고 4조 위안의 대규모 재정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빠르게 경기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이는 과잉 유동성으로 이어져 2009년 4/4분기부터 다시 플러스로 전환된 물가상승률은 2010년 4/4분기 4.7%로 급등하였으며, 이러한 고물가는 1년간 지속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돼지고기를 비롯한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며 물가상승률은 5.4%에 달했으며, 3/4분기의 경우 6.3%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010년 이후부터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긴축조치를 시행한 결과 2012년 들어서는 물가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긴 했지만 1년 넘게 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인 4%를 줄곧 상회하여 거시경제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6] 금융위기 전후 중국의 중국 금리와 지급준비율



자료: CEIC Database(2012년 9월 검색).

또한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의 증가는 지방 정부의 부채 증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투자증가율이 201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도 부채 상환 부담으로 지방 정부의 신규 투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중국 심계서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지방 정부의 채무는 10.7조 위안에 달하는데 이는 GDP의 약 27% 수준이다.<sup>14)</sup> 2015년까지 지방 정부의 채무 상환 압력이 크며, 2012년과 2013년이 상환 절정기가 될 것이다.

한편 IMF 통계에 따른 중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2011년 기준 26%로 미국 103%, 일본 230%에 비하면 건전한 수준이다.

13) 반면 민간의 고정자산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14) 이중 직접 채무는 6.7조 위안, 보증 채무는 2.3조 위안, 기타 채무는 1.7조 위안으로 직접 채무가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였다. 또한 이중 8.5조 위안이 은행 대출로 이는 2010년 말 중국 전체 위안화 대출 잔액 47.9조 위안의 약 1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표 5〉 지방 정부 부채 추이

(단위: 조 위안, %)

|           | 2007 | 2008 | 2009 | 2010 |
|-----------|------|------|------|------|
| 부채 규모     | 4.5  | 5.6  | 9.0  | 10.7 |
| GDP 대비 비율 | 17.0 | 17.7 | 24.5 | 26.7 |

자료: 中國審計署(<http://www.audit.gov.cn>, 2012년 9월 검색).

〈표 6〉 지방 정부 부채의 만기 현황

(단위: 조 위안, %)

| 연도     | 직접 채무 |       | 보증 채무 |       | 기타 채무 |       | 합계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2011   | 1.87  | 27.8  | 0.36  | 15.6  | 0.39  | 23.5  | 2.62  | 24.5  |
| 2012   | 1.30  | 19.4  | 0.30  | 12.7  | 0.24  | 14.7  | 1.84  | 17.2  |
| 2013   | 0.80  | 11.9  | 0.23  | 9.7   | 0.19  | 11.6  | 1.22  | 11.4  |
| 2014   | 0.62  | 9.2   | 0.23  | 9.7   | 0.15  | 8.9   | 1.00  | 9.3   |
| 2015   | 0.49  | 7.4   | 0.18  | 7.6   | 0.13  | 7.8   | 0.80  | 7.5   |
| 2016이후 | 1.63  | 24.4  | 1.04  | 44.6  | 0.56  | 33.6  | 3.24  | 30.2  |
| 합계     | 6.71  | 100.0 | 2.34  | 100.0 | 1.67  | 100.0 | 10.72 | 100.0 |

자료: 中國審計署(<http://www.audit.gov.cn>, 2012년 9월 검색).

지방 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키로 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저장(浙江), 선전(深) 등 4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가 채권발행을 남발할 경우 재정이 더욱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2012년 6월 지방 정부의 채권발행을 다시 금지시켰다.

지방 정부의 재정수입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 정부는 부동산세, 자원세 등 개혁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 11월 원유, 천연가

스, 석탄, 희토류에 대해 세제개편을 시행하여 기존의 종량제에서 증가제로 전환하였으며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 초 상하이와 충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세도 조만간 여러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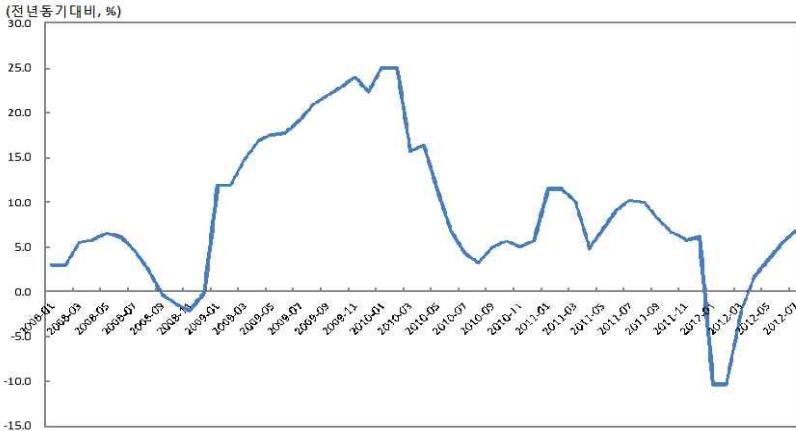
한편 지방 정부는 세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개발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데, 부동산투자의 도시 전체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비중은 2009년 18.7%, 2010년 20.0%에서 2011년에는 20.4%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뿐더러 대출을 실행한 은행권으로까지 영향이 파급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 주택가격은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9년 1월부터 경기부양조치의 효과가 가시화면서 10%를 넘어섰으며, 2010년 1월과 2월에는 무려 25.0%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0년 4월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sup>15)</sup> 이후 주택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2012년 1-3월에는 마이너스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한 중국 정부가 2012년 6월과 7월에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유동성을 약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2012년 7월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대비 6.8% 상승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

15) 이러한 규제 정책에는 부동산대출 금리 인상, 첫 납부금 최저비율 인상 등이 포함된다(國務院, 2010).

[그림 17] 금융위기 전후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률



자료: CEIC Database(2012년 9월 검색).

개혁·개방 이래 중국 부동산은 도시화에 따른 주택수요의 증가와 원자재를 비롯한 물가상승, 투자 주도적인 성장방식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 과열 양상이 고조되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는 여러 차례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중국경제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방 정부가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토지양도금에 의존하고 있는 등 여러 원인으로 번번이 실패로 막을 내렸다. 이번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의 성공 여부도 향후 정책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다. 시장경쟁 환경

중국의 국유기업은 비효율과 부패의 대명사로 꼽힌다. 개혁·개방 이전 거의 100%에 가깝던 중국 국유기업의 비중은 이후 몇 번의 개혁을 통해 현재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국유기업은 비국유기업에 비해 부가가치 및 이윤 증가율이 낮은 등 국유기업문제는 여전히 해

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sup>16)</sup> 2010년 말 기준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는 GDP 대비 37.2%에 달해, 중국경제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퇴직 직원의 자녀가 부모의 자리를 물려받는 중국 국유기업의 일자리 세습 관행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중국경제 역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유기업, 특히 중앙의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중국에는 약 15만 4,000개의 국유기업이 있다. 이중 중앙기업이 117개인데 이들 중앙기업은 중국 국유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2010년 중앙기업의 매출액은 약 19조 위안으로 전체 국유기업 매출액의 65%를 차지하였다.

중앙기업은 중국의 핵심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 산업을 국가 독점산업으로 지정하여 민영기업의 참여를 차단하고 있으며, 주로 중앙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석유화학, 전력, 통신, 자원, 항공, 운수, 군사 등 7대 국가 독점산업에 속한 중앙기업은 약 46개로, 이들 중앙기업의 매출액이 각 산업 매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달한다(한우덕, 2012).

중국 국유기업들은 정부 주도하의 구조조정으로 M&A를 통해 부지런히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향상하고 있다. 2011년 154개 대기기업이 1,111개 기업을 인수·합병하였는데, 이중 110개 국유기업이 918개 기업을 인수·합병해 전체 M&A 건수의 82.6%를 차지했다. 중앙기업 간 인수합병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2003년 196개에 달하던 중앙기업은 2012년 9월 현재 117개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기간 총 자산은 8조 위안에서 28조 위안으로, 매출액

16) 2011년 국유기업의 공업부가가치 증가율과 이윤 증가율은 각각 9.9%와 15.0%로 전체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과 이윤 증가율보다 각각 4%p, 10.4%p 낮았다.

은 3조 위안에서 19조 위안으로 증가했다(한우덕, 2012). 국유기업들은 M&A를 통해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도 크게 향상됐다. 2012년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기업에 중국기업이 73개 포함되었는데 이중 국유기업이 64개, 중앙기업이 42개에 달했다(Fortune, 2012).

중국 내 주요 매출기업은 국유기업에 몰려 있는데 중국기업연합회와 중국기업가협회가 발표한 중국 내 500대 기업에 따르면 2012년 시노펙(중국석유화학)이 2조 5,500억 위안의 매출을 올려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석유천연가스, 중국국가전망, 공상은행, 건설은행, 이동통신 등이 뒤를 이었다. 500대 기업 중 국유기업이 310개로 전체의 62.0%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국유기업의 매출액은 36.8억 위안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하여 여전히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중국 500대 기업에서의 국유기업의 위상

(단위: 개, 조 위안, %)

|      | 2009        | 2010        | 2011        | 2012        |
|------|-------------|-------------|-------------|-------------|
| 기업 수 | 331 (66.2)  | 329 (65.8)  | 316 (63.2)  | 310 (62.0)  |
| 매출액  | 18.2 (83.1) | 23.4 (84.7) | 30.1 (82.8) | 36.8 (81.9) |

자료: 中國企業聯合會·中國企業家協會의 연도별 자료.

국유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에서도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스톡 기준)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말의 81%에서 2010년 말에는 66.2%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다(中國商務部·國家統計局·國家外匯管理局, 2011).

중국 대부분의 국유기업은 부동산개발 관련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개발 자회사들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을 형성하는 데 일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방 정부 수익구

조상 공유토지의 양도에서 오는 수익이 세금징수금보다 많다.

2012년 2월 World Bank와 중국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China 2030”에서는 이러한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무원은 3월 18일 「2012년 경제체제개혁 심화 사업에 대한 의견(國務院關於2012年深化經濟體制改革重點工作的意見)」을 배포하고 첫 번째 과제로 국유자산 관리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천명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중국 정부는 현 SASAC(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체제를 SAMC(국유자산관리회사)체제로 전환하고, 국유기업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비유통주를 축소하며, 국유기업 이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대상을 확대하며, 국유자본 경영예산을 국가예산에 편입시켜 사회공공지출에 투입하는 등을 방향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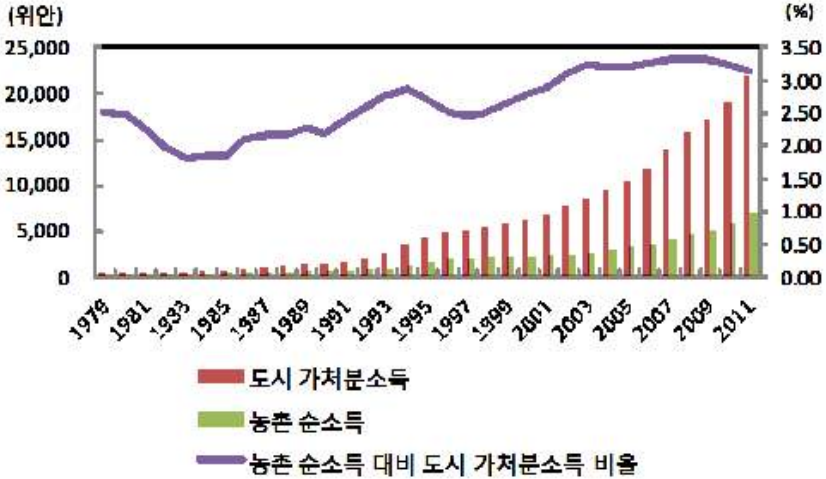
## 라. 복지

개혁·개방 이후의 30여 년간 중국경제는 연평균 10%대의 고속 성장을 구가하였으나, 동시에 사회구성원 간 소득격차 또한 크게 확대되었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1982년의 0.28에서 2001년에는 0.45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0.5에 육박해 국제 경계수준인 0.4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에서 소득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의 하나다.

중국의 소득격차는 보통 도농 간 소득격차, 도시 간 소득격차 및 농촌 간 소득격차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그중 도농 간 소득격차는 중국의 소득불균형 심화를 초래한 가장 큰 부분이다. 도시 가처분소득과 농촌 순수입 비율은 80년대 중반에는 1.86이었으나 2002년 이래 줄곧 3을 넘었으며 2007-2009년에는 3.3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다 2010년에 농민 소득증가율이 처음으로

도시민의 소득증가율을 앞서며 도농 간 소득격차는 3.23으로 하락하였고 2011년에는 3.13으로 진일보 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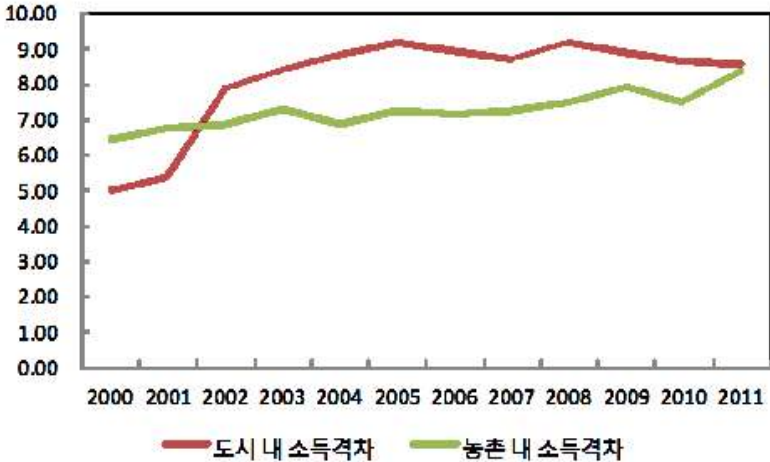
[그림 18]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도농 간 소득격차



자료: CEIC Database(2012년 9월 검색).

도시 내 소득격차 및 농촌 내 소득격차도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되었다. 도시 최고소득군(상위 10%)과 최저소득군(하위 10%)의 소득격차는 2000년의 5.02에서 2011년에는 8.56으로 늘어났다. 도시 내 소득격차의 확대는 대량의 농민공들이 도시로 유입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도시 내 소득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촌 최고소득군(상위 20%)과 최저소득군(하위 20%)의 소득격차는 2000년의 6.47에서 2011년에는 8.39로 확대되었으며, 최근 줄어들고 있는 도시 내 소득격차와 달리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림 19] 금융위기 전후 중국의 도시 내 및 농촌 내 소득격차



주: 도시 내 소득격차는 도시 최고소득군(상위 10%)과 최저소득군(하위 10%) 간 가처분 소득 비율이며, 농촌 내 소득격차는 농촌 최고소득군(상위 20%)과 최저소득군(하위 20%) 간 순소득 비율임.

자료: CEIC Database(2012년 9월 검색).

이와 같은 계층 간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민생 개선과 안정을 중요한 문제로 삼고 이를 통해 소득격차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도농 간 및 농촌 내 소득격차를 감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도시화를 추진하여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도시로 이전시킴과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농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의 생산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3농(농업, 농촌, 농민) 관련 내용은 12차 5개년 계획의 제1장에서 다루고 있다.

도시 내 소득격차를 줄이고 동시에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0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연평균 13%씩 인상하여 2010년의 2배에 이르게 하고, 대부분 지역의 최저임금이 도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40%가 되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이후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사회보험법과 같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들을 잇달아 시행하며 노동법률 환경을 親노동자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소득분배 개선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중국 정부는 민생 개선을 위해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는 규제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서민들을 위한 보장성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국 정부는 총 3,600만 채의 보장성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 IV.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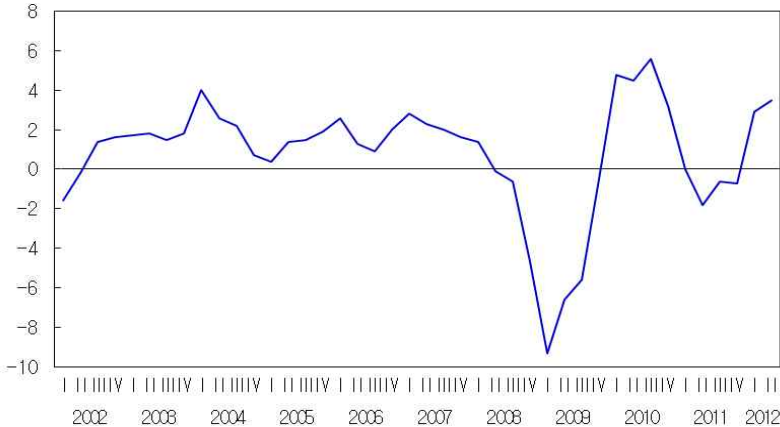
### 1. 경제여건

#### 가. 거시경제 여건

일본경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6%의 실질성장을 기록함으로써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지속된 저성장 기조를 벗어난 듯 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치면서, 장기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각각 -5.5%, 4.5%, -0.8%였다.

2008년 2사분기부터 가시화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엔고가 겹치면서 전례 없는 수출급감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기업 부문의 생산 및 설비투자 급감, 고용악화를 통해 가계부문의 소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말 이러한 상황을 디플레이션하의 저성장 경제로 규정한 바 있다.

[그림 20] 금융위기 전후 일본경제의 성장률



자료: 内閣府, 『国民経済計算(GDP統計)』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 경제에 제조업의 서플라이 체인 단절과 이에 따른 제조업체의 해외이전 가속화 및 산업공동화 우려를 제기하였고, 수요측면에서도 원전사고에 따른 소비 및 투자심리의 위축을 초래하였다. 특히, 동일본대지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엔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가동 중단은 각각 수출감소와 수입증가를 초래하여, 일본의 무역수지는 2차 오일쇼크 이후 31년 만에 2.5조 엔의 적자를 기록하였다<sup>17)</sup>.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수출입은 오히려 기업의 설비투자보다 부침이 심한데, 그만큼 일본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17)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에서는 2011년에 기록한 무역수지 적자가 향후에도 구조화될 지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나,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원유·LNG 수입의 급증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의 일본 제조업경쟁력이 유지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인다. 日本総研(2012a)은 201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표 8〉 일본 GDP의 주요 수요항목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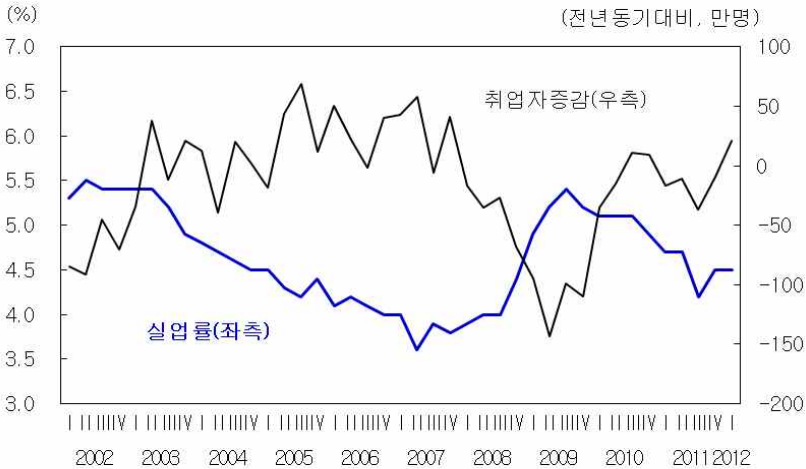
(단위: 연간증가율, %)

| 년도   | 민간소비 | 설비투자  | 정부지출 | 수출    | 수입    |
|------|------|-------|------|-------|-------|
| 2000 | 0.6  | 6.5   | 4.6  | 12.6  | 10.7  |
| 2001 | 1.6  | -0.4  | 4.2  | -7.0  | 0.9   |
| 2002 | 1.2  | -5.2  | 2.6  | 7.9   | 0.3   |
| 2003 | 0.4  | 4.9   | 1.9  | 9.5   | 3.9   |
| 2004 | 1.1  | 3.5   | 1.5  | 14.0  | 7.9   |
| 2005 | 1.5  | 5.7   | 0.8  | 6.2   | 4.2   |
| 2006 | 1.1  | 4.0   | 0    | 9.9   | 4.5   |
| 2007 | 1.0  | 4.9   | 1.1  | 8.7   | 2.3   |
| 2008 | -0.9 | -2.6  | -0.1 | 1.4   | 0.3   |
| 2009 | -0.8 | -14.3 | 2.3  | -24.2 | -15.7 |
| 2010 | 2.5  | 0.8   | 2.2  | 24.3  | 11.2  |
| 2011 | 0.1  | 1.3   | 2.0  | -0.1  | 6.3   |

자료: 内閣府, 『国民經濟計算(GDP統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와 같은 수출 감소와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경기악화는 고용악화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으로 일본의 전체 취업자 수는 2001년 말 6,382만 명에서 2007년 말에는 6,428만 명으로 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008년 말 6,360만 명에서 2011년 말에는 6,250만 명으로까지 감소하였다. 다시 말해 2011년 말 현재 일본의 취업자 수는 10년 전 수준을 밀돌고 있다. 실업률은 2002년 초 5.3%에서 2007년 말에는 3.8%로까지 떨어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다시 5%대로 진입하였다가 2011년 말 현재에는 4.5%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21] 금융위기 전후 일본의 고용 상황



자료: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

한편, 일본은행(BOJ)은 1990년대 말부터 2005년까지 지속된 디플레이션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재현됨에 따라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실시한 바 있는 일본은행은 2008년 10월 정책금리를 0.5%에서 0.3%로 인하한 이래, 2010년 10월 이후에는 0~0.1%의 정책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행은 지난 2012년 2월 14일 금융정책 운용 상 목표 물가상승률을 1%로 설정한다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였다. 일본은행(BOJ)은 이와 같은 목표를 중장기 물가안정 목표(Price Stability Goal)로 명명하고 있으나, 2012년 상반기 중에도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1%에 미치지 못하는 -0.4~0.5% 수준에 머물고 있어 디플레이션 해소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sup>18)</sup>.

18) 그간 일본은행은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 이하의 플러스 영역으로, 중심은 1% 정도”로 제시함으로써 표현이 애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일반적으로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내에 목표물가상승률을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inflation target(BOE)과, 장기적 목표로서 제시하는 inflation goal(FRB)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일본은행이 도입한 물가안정목표제는 목표 달성기간과 실패 시 대응책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미국 FRB가

[그림 22] 금융위기 전후 일본경제의 물가



자료: 総務省統計局, 『物価に関する統計』

## 나. 산업 및 수출입 구조

일본은 1973년 1차 오일쇼크 이전까지 연평균 10%를 초과하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농림·어업의 쇠퇴와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조업의 융성을 경험하였다. 그 이후에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감소하여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었다.

2009년 일본의 각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전체 4조 9,102억 달러<sup>19)</sup> 가운데 농림·어업 1.3%, 광업 0.1%, 제조업 18.0%, 건설 6.2%, 서비스업 74.4%이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 동안 제조업 비중은 4.6% 포인트 줄고, 서비스업 비중은 무려 7.2% 포인트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2009년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100%) 중에서는 식료품

채택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와 흡사하다는 평가이다. 日本經濟新聞, 2012.3.13일자 참조.

19) 2009년 일본의 GDP 규모는 5조 351억 달러(IMF database)이다.

(17.0%), 기초금속(15.1%), 전기·전자(13.9%), 운송장비(13.3%), 화학제품(9.0%)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서비스업(100%) 중에서는 부동산(17.5%), 도·소매(15.8%), 행정·국방(11.9%), 사업서비스(10.7%), 금융중개(7.1%)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1995년과 비교하여 제조업 중에서는 식료품과 운송장비의 비중이 다소 늘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소매업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IT발달과 고령화를 배경으로 사업서비스나 보건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9〉 일본의 주요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 년도   | 농림어업 | 광업  | 제조업  | 건설  | 서비스  |
|------|------|-----|------|-----|------|
| 1995 | 1.7  | 0.3 | 22.6 | 8.2 | 67.2 |
| 2000 | 1.6  | 0.3 | 21.2 | 7.3 | 69.6 |
| 2005 | 1.4  | 0.2 | 20.6 | 6.2 | 71.6 |
| 2009 | 1.3  | 0.1 | 18.0 | 6.2 | 74.4 |

자료: WIOD.org

한편, 일본의 산업별 무역구조에서는 ‘자원빈국, 제조업강국’으로서, 원유나 원자재 등 원료를 수입하여 고부가가치의 제조업 제품을 가공·수출하는 일본의 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1995년 이후 일본의 전체 수출액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압도적이며, 전체 수입액 중에서 광업부문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표 10〉 일본의 주요 산업별 수출입구조

(단위: 억 엔, 비중 %)

| 년도   | 농림어업          |                  | 광업              |                    | 제조업                |                    | 서비스                |                   |
|------|---------------|------------------|-----------------|--------------------|--------------------|--------------------|--------------------|-------------------|
|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 1995 | 344<br>(0.1%) | 21,161<br>(5.9%) | 880<br>(0.2%)   | 52,014<br>(14.5%)  | 366,165<br>(81.8%) | 234,000<br>(65.4%) | 79,975<br>(17.9%)  | 50,846<br>(14.2%) |
| 2000 | 680<br>(0.1%) | 18,788<br>(4.2%) | 757<br>(0.1%)   | 75,459<br>(16.8%)  | 438,443<br>(80.1%) | 297,872<br>(66.1%) | 107,415<br>(19.6%) | 58,288<br>(12.9%) |
| 2005 | 688<br>(0.1%) | 20,480<br>(3.3%) | 1,216<br>(0.2%) | 140,252<br>(22.8%) | 564,418<br>(79.2%) | 394,896<br>(64.1%) | 146,164<br>(20.5%) | 60,320<br>(9.8%)  |
| 2009 | 726<br>(0.1%) | 19,619<br>(3.5%) | 1,086<br>(0.2%) | 150,374<br>(26.6%) | 502,600<br>(85.4%) | 354,359<br>(62.7%) | 83,784<br>(14.2%)  | 40,929<br>(7.2%)  |

주: ( )안 수치는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WIOD.org

2009년 일본의 제조업 수출은, 부품·소재분야와 전기·전자, 자동차, 일반기계·정밀기계·공작기계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반영하여, 전기·전자(제조업 수출액의 26.6%), 운송장비(26.5%), 기초금속(15.1%), 기계류(11.8%)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단, 199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진행된 디지털화와 모듈화 영향으로, 고도의 숙련기술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일본의 전기·전자제품과 기계류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서비스업은 2009년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14.2%와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은 주로 도매업(서비스업 수출액의 41.5%)와 수상운송(22.0%)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수입은 사업서비스(30.1%), 수상운송(23.7%), 항공운송(14.6%), 도매업(10.7%)으로 비교적 분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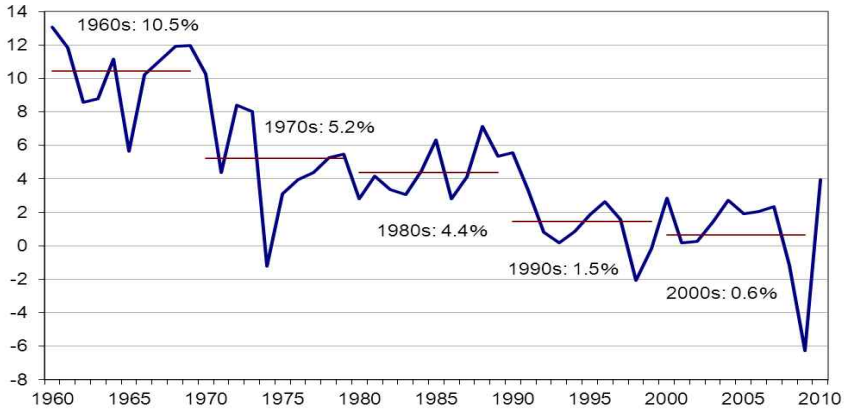
## 2. 경제 현안과 정책 동향

### 가. 성장 잠재력 확충

일본경제는 1990년대 초의 버블붕괴에 따른 불량채권 문제를

거의 해소하였음에도 2000년~2009년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은 0.6%로서, 1980년대의 4.4%는 물론 1990년대의 1.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림 23] 일본의 장기 실질 GDP 성장률



자료: Kawai and Morgan(2012)

일본의 장기적 경제성장률 저하는 1990년대의 버블붕괴나 그 이후의 금융·재정정책의 실패 같은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의 만성적인 수요부족과 공급측면에서의 생산성 하락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sup>20)</sup>.

우선 일본경제의 만성적인 수요부족 문제는 OECD가 추정·공표하고 있는 GDP 갭<sup>21)</sup> 추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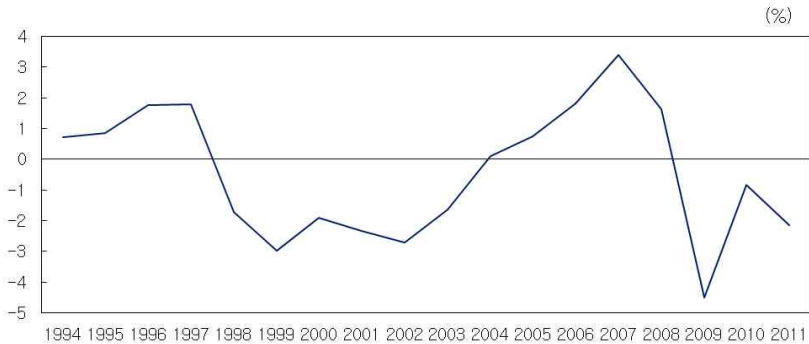
20) IMF(2012)는 일본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첫째, 재정 건전화를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확보, 둘째 경기회복과 양적 완화를 통한 플러스대의 인플레이션률 회복, 셋째 여성노동력 공급 확대, 국내 시장의 개방, 금융중개기능의 회복, 그리고 FTA 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과 같은 구조개혁에 더욱 매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1) 일본 내각부는 잠재 GDP를 과거 경제 트렌드에 비추어, 평균적으로 생산요소를 투입하였을 때 실현가능한 GDP로 정의하고 있으나, OECD 추정과는 달리, 잠재 GDP 추정 시 TFP(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완화나 노동시간의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과대평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내각부의 잠재 GDP 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野村(2009) 참조.

면 1990년 초반 버블붕괴 이후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는 줄곧 유효수요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경제의 유효수요 부족 원인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금융 중개기능의 저하와 디플레이션에 따른 투자의욕 상실, 소비감소를 초래하는 버블붕괴에 따른 자산효과, 그리고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엔고와 같은 일시적 요인 뿐 만 아니라,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었던 만성적 저축초과 현상<sup>22)</sup>도 간과할 수 없다.

[그림 24] 일본의 GDP 갭 추이



주: GDP 갭=(실제 GDP- 잠재 GDP)/잠재 GDP.  
 자료: OECD(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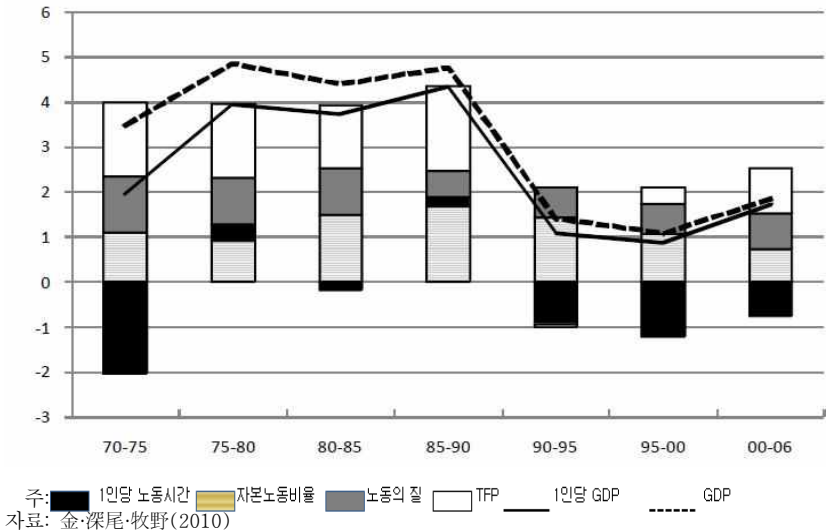
일본의 장기불황에 대한 공급측면에서의 원인은 성장회계 (Growth Accounting)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金·深尾·牧野(2010)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1975년~1990년 연평균 4.0%였으나 1990년~2006년에는 1.3%로 하락하였다. 이와

22) 일본의 민간저축투자 밸런스를 나타내는 명목 GDP 대비 저축초과(=민간저축-민간투자) 비율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는 연간 5% 정도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연간 7~10%대로 확대되었다. 内閣府 国民経済計算 통계 참조.

같이 두 기간 사이에 1인당 GDP 성장률이 2.7% 포인트 하락한 이유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3.9%에서 2.2%로 하락한 것과 1인당 노동시간 증가율이 0.1%에서 -1.0%로 하락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나아가, 두 기간 사이에 1.7% 포인트(3.9%→2.2%) 하락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분해해 보면, TFP(총요소생산성) 증가율 하락 1.2%포인트와 자본노동비율 증가율의 하락 0.4% 포인트, 그리고 노동의 질, 즉 인적자본의 축적률 하락 0.1% 포인트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5] 일본의 1인당 실질 GDP성장의 요인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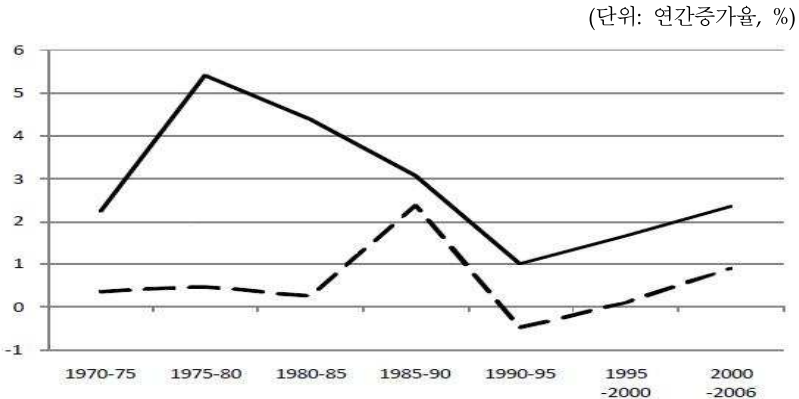
(단위: 연간증가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경제의 노동생산성 하락, 그 중에서도 TFP 증가율의 하락은 장기불황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산업별로 보았을 때는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의 TFP 증가율 하락이 더 현저하나, TFP 증가율 자체는 여전히 서비스·농업 같은 비제조업 부문이 더 낮다. 金·深尾·牧野(2010)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에서는 TFP 증가율이 1975~1990년 동안 연평균 4.3%였으나 1990~2006년에는 1.5%로 2.8% 포인트 하락하였고,

비제조업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1.0%에서 0.1%로 0.9% 포인트 하락하였다.

[그림 26] 일본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주: — 제조업 - - - 비제조업  
 자료: 金·深尾·牧野(2010)

## 나.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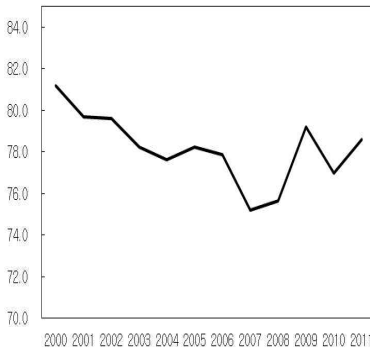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경제는 1990년대 버블붕괴를 계기로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의 저축초과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에 커다란 변화는 없다. 이러한 저축초과 현상은 거시경제의 안정성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일본의 장기불황이 결국은 디플레이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로서는 그렇게 환영할만한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의 저축초과는 소비감소, 기업의 신규투자 회피, 고용축소, 소비감소라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가계부채는 2000년 말 약 413조 엔에서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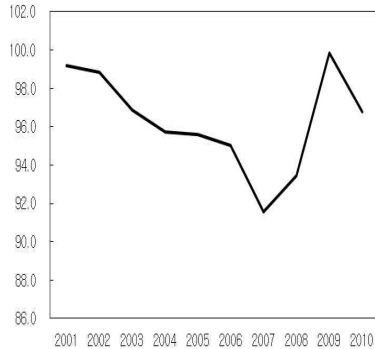
말에는 약 368조 엔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이를 GDP 대비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더라도 2000년 말 81.2%에서 2011년 말에는 78.6%로 감소하였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01년 말 99.2%에서 2010년 말에는 96.8%로 감소하였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소득의 감소로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현상도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는 디플레이션에 따른 비관적인 경기전망, 그리고 이에 따른 차입기피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7] 일본의 가계부채 추이

(단위: GDP 대비, %)



(단위: 가처분소득 대비, %)



자료: 日本銀行, 『資金循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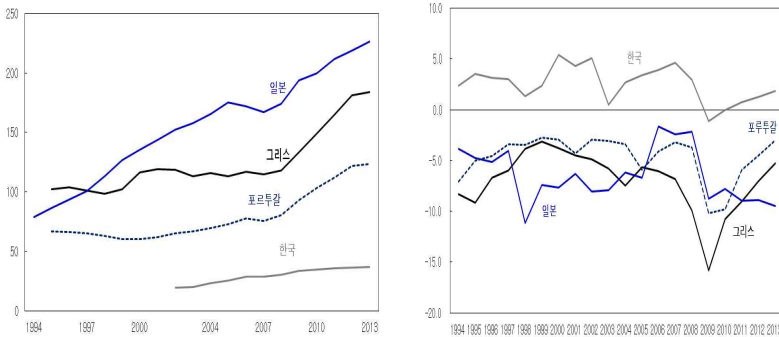
거시경제 안정성 관점에서 일본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불안이다. 물론 일본에서의 재정위기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초과한 1997년 시점부터 시작되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재정위기 논란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OECD는 2012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19.1%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 포르투갈보다 높은 수준이고 독일, 프랑스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재정불안은 재정수지 추이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말 일본정부가 경기대책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시한 공공투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감소,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가중되고 있는 사회보장지출 등 복합적 요인에 근거하고 있다.

[그림 28] 일본의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추이

국가채무 (단위: GDP 대비, %)

재정수지(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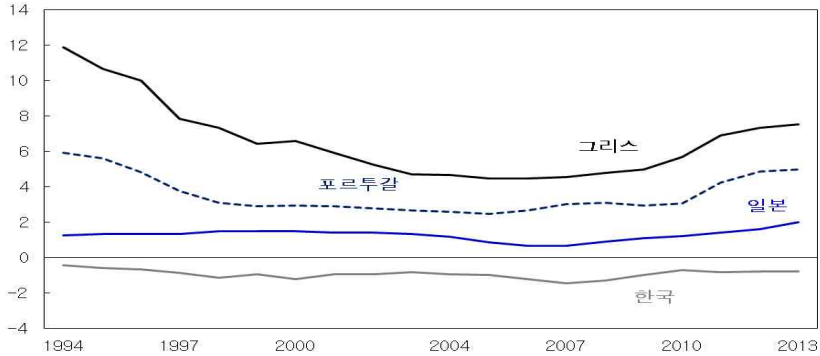


자료: OECD(2011a).

국가채무 비율만으로는 향후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어선 시점은 1997년이고 2010년에는 200%를 초과하였다. 그럼에도 일본이 극단적인 재정 파탄을 모면할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저금리 기조에 있다. 1985년만 하더라도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7.2%였으나 2005년에는 1.4%로까지 내려갔고, 2012년 9월 현재는 1%도 채 안 된다. 일본 정부로서는 고금리의 국채를 저금리 국채로 얼마든지 차환할 수 있었고, 국채이자부담액도 2000년까지 연간 10조엔 정도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7조~8조 엔대로 낮아지는 저금리 혜택을 누렸다. 일본이 그리스나 포르투갈에 비해 국채비율은 높지만, 순이자부담이 낮은 것은 이와 같은 저금리 혜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9] 일본의 국가채무 순이자부담 비율 추이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201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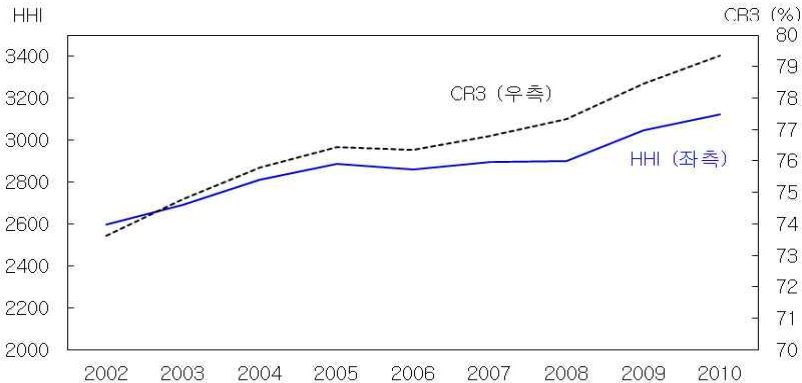
일본정부 역시 이미 1990년대 말부터 각종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03년까지 3%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어 2006년에는 고이즈미 내각이 2011년까지 기초 재정수지를 흑자화하겠다는 계획을, 그리고 2010년 6월에는 간 내각이 2015년 GDP 대비 기초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010년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는 흑자화하겠다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대지진 같은 경제위기 발발로 대부분 성과 없이 무산되었다.

2012년 8월에는 노다 내각이 재정건전화와 사회보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제출한, 현행 5%의 소비세(부가가치세)를 2014년 4월부터 8%로 인상하고 2015년 10월부터는 10%로 인상하는 법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물론 이번 소비세 인상 조치는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임에는 틀림없으나, 5%의 소비세 인상만으로 일본재정이 조기에 건전화되고 사회보장도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 논자는 드문 것 같다.

## 다. 시장경쟁 환경

일본경제에서 제조업 부문의 시장경쟁 실태를 보여주는 시장 집중도 지수의 추이를 생산량 기준의 CR3과 허핀달지수(HHI)를 통해 살펴보면 <그림 30>과 같다.<sup>23)</sup> 일본 제조업은 2002년 시점에서만 보더라도 CR3 73.6%, HHI 2959.8로서 매우 시장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10년에는 CR3 79.4%, HHI 3121.5과 같이 이러한 독과점 현상이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1950년~1960년대의 시장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을 배경으로 형성된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독과점 시장구조가 매우 확고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도 대외개방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림 30] 일본 제조업의 시장집중도(CR3 및 HHI) 추이



23)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975년부터 2년을 주기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생산·출하집중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2010년 조사 시, 대상품목은 제조업 258개 품목(공업통계표 6자리 분류기준)과 비제조업 52개 품목(일본표준산업분류 4자리 분류기준)이고, 지수로는 생산누적집중도는 CRk(k=3,4,5,8,10)와 HHI, 출하누적집중도는 CRk(k=3,4,5,8,10)와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을 사용하고 있다. 단, 매회 조사대상 품목이 동일하지 않아 시계열적으로 일관성 있는 자료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jftc.go.jp/katudo/ruiseki/shihyou.html>, 참조)

주: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93개 제조업 품목의 단순평균값임.

자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데이터를 기초로 필자 작성

일본 제조업의 이러한 시장경쟁 부족 또는 퇴조는 국내 소비자의 후생감소 뿐만 아니라 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완전경쟁이 아닌 독과점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내외적 경쟁압력에 덜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혁신을 통한 경쟁 인센티브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경제에서 보건, 의료, 간병, 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과 농·어업은 제조업보다 시장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성과 성장잠재력을 크게 상실하고 있는 분야로 지목되고 있다.(Kawai and Morgan, 2012, p.17) 특히, 일본의 서비스산업은 전체 GDP와 고용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진입 및 퇴출 규제 등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森川(2009)는 1995년~2005년을 대상으로 일본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국내 제조업보다 낮고, 미국의 서비스업 생산성보다 20%~60% 낮음을 실증하였다.

일본 서비스업(비제조업)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를 경쟁정책 관점에서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sup>24)</sup>. 첫째, 일본 정부의 경쟁제한 행위이다. 이러한 경쟁제한은 공공사업 수주시 중소기업 우선 정책과 양식어업의 면허제도, 그리고 의약품 판매 규제가 대표적이다<sup>25)</sup>. 이들은 각각 지방 중소기업과 지방 어민 및 어업조합, 그리고 약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대기업과 소비자에 불리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24) 이하 일본의 경쟁정책에 관한 문제점은 八代(2008)를 참조한 것이다.

25) 공공사업 수주시 중소기업 우선 정책은 ‘관공수요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 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고, 양식어업의 면허제도는 어업법에 의거하여 광역단체가 일정범위의 어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특정구획어업권’을 개인이나 어업조합에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약품 판매 규제는 약사법에 의거하여 의약품 판매를 약제사의 대면판매로 한정함으로써 소매점의 제조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특정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보조금지급이나 특정분야에 대한 주식회사(기업)의 진입금지 같은 제도적인 규제 장벽이다. 우선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편중된 세제혜택·보조금 지급은 각각 기업이 설립한 특수학교와 국제학교에 대한 차별대우,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유료양로원에 대한 차별대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특정분야에 대한 기업의 진입금지 사례는 농지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기업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제와, 의료의 영리적 행위 금지(배당금지)에 의거하여 대규모 민간병원의 출현을 막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일본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경쟁 촉진을 도모하고자 했던 시기는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당시 내각부 산하의 경제개혁위원회가 “경제적 규제는 원칙적 자유, 사회적 규제는 최소한, 강력한 제3의 기관으로서 행정개혁위원회 설치”라는 방침을 정한 다음부터 규제완화가 본격화되었다. 이어 1998년에는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1년에는 종합규제개혁회의, 2004년에는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 그리고 2007년에는 규제개혁회의를 설치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9년 정권교체를 실현한 일본 민주당 정권은 규제완화가 빈부격차를 확대한다는 인식 아래 정부차원의 규제완화 정책은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금지법 운용과 관련해서는, 199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국기능강화 및 직원 수 증원, 1999년 독점금지법 개정을 통한 불황 카르텔 및 합리화 카르텔 폐지, 2000년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단청구제도 도입 및 손해배상제도의 정비 같은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 라. 복지

일본의 사회보장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관련 정부지출이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물론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일본정부의 일반회계 세수가 1990년 60.1조 엔에서 2011년에는 40.9조 엔으로 격감한 부분이 재정압박의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지만, 사회보장관련 지출 역시 1990년 11.5조 엔에서 2011년에는 28.7조 엔으로 급증하였다. 2009년 기준, 일본의 사회보장급여비<sup>26)</sup> 항목 중에서 연금이 51.8%를 차지하였고 의료는 30.9%, 기타복지 분야는 17.3%를 차지하였다.

둘째, 일본정부의 사회보장관련 지출은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자관련 지출비중이 매우 높아 저출산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OECD의 사회지출통계(Social Expenditure Statistics)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일본의 정부부문 사회지출 항목 중 고령자관련 사회지출 비중은 47.0%로 한국(21.3%)보다 2배 이상 높고, G7 중에서는 이탈리아(47.2%)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가족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rogramme) 지출 같은 현역세대를 수급자로 하는 지출항목의 비중은 각각 4.2%, 0.9%로 뉴질랜드나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과 같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다<sup>27)</sup>.

셋째, 고령자에 대한 국가부담은 높지만 실제 고령자 1인당 연금수급액은 그다지 높지 않아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가 수혜율은 낮은 저복지라는 점이다<sup>28)</sup>. 연금수급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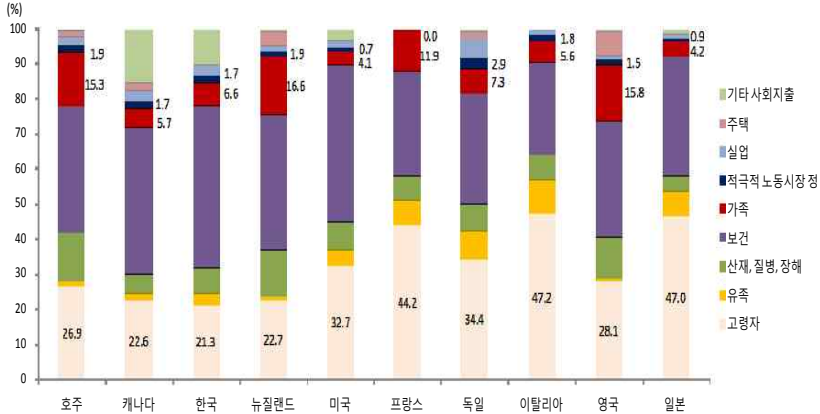
26) 사회보장급여비란 ILO(국제노동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1년간 국민에게 제공된 금전 또는 서비스 합계를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정부의 사회보장관련 지출은 예산에 국한됨에 유의하기 바란다.

27) 여기서 ‘가족’ 항목에 대한 사회지출은 정부가 가족을 지원하는데 지급한 현금 및 현물 급부로서 일본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어린이수당과 건강보험조합이 지급하고 있는 출산일시금이 대표적이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항목에 대한 사회지출은 근로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거나 근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한 사회지출을 의미한다.

28) 일본의 사회보장 수준이 낮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로는 국민연금 미가입 및 납부를 저하를 들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995년 3,131만 명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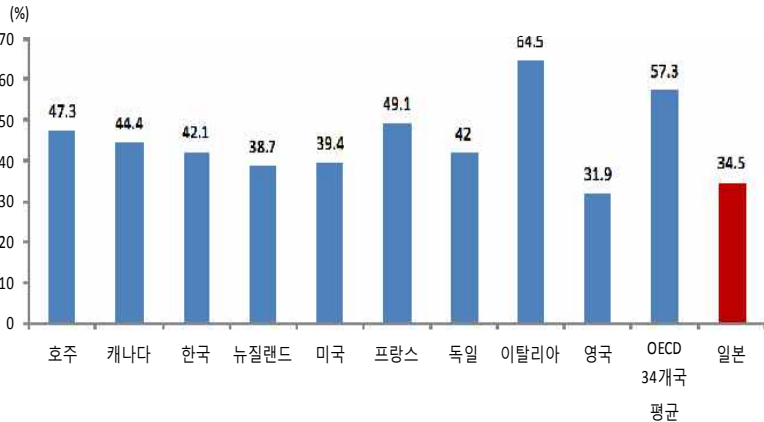
표인 소득대체율을 보면, 일본은 2007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평균치 57.3%보다 낮고, G7 중에서는 영국 31.9% 다음으로 낮다.

[그림 31] 일본의 사회지출 구성 내역(2007년)



자료: OECD(2011b)

[그림 32] 일본의 소득대체율(2007년)



주: 소득대체율(Gross replacement rate by earnings)이란 임금소득이 평균수준인 남성 연금수급자의 연간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액 비율을 의미함.

자료: OECD(2011b)

2010에는 2,943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납부율은 1995년 84.5%에서 2011년에는 59.3%로 저하하였다. 일본의 공적연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西沢(2011) 참조.

일본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사회보장과 세제의 통합개혁안은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고, 사회보장 시스템도 강화하겠다는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었다. 이러한 통합개혁안은 2012년 8월 국회에서 8개 법안이 최종 통과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에서 지적한 바 있는 소비세 인상 계획을 제외하고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내각 산하에 설치될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가 1년에 걸쳐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개혁방향을 유보한 상태이다<sup>29)</sup>.

---

29) 주요 쟁점은 소득비례연금 및 최저연금제도의 도입 여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금 및 건강보험 확대 폭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内閣官房(2012) 및 日本総研(2012b) 참조.





## V. 한·중·일 비교분석

### 1. 경제여건

#### 가. 거시경제 여건

한중일 모두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2008년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한 회복세로 한국경제는 금융위기의 일차적인 충격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벗어났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2010년 2/4분기를 시작으로 다시 성장 속도가 느려졌으며 2012년 들어서는 7-8%대로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위안화 평가 절상 등 대내외 원인으로 2011년 4/4분기부터 수출증가세가 10%대로 둔화된 것이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며 2012년 2/4분기에 2.4%까지 성장률이 하락한 상황이다. 일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치면서, 장기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2008년 2사분기부터 가시화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엔고가 겹치면서 전례 없는 수출급감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기업부문의 생산 및 설비투자 급감, 고용악화를 통해 가계부문의 소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금융위기의 일차적인 충격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벗어났으나, 유럽 및 미국 등의 부채문제로 인해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완전히 정상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며 2012년 2/4분기에 2.4%까지 성장률이 하락한 상황이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가 크게 부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투자가 소비보다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설비투자 증가세도 점차 둔화되어 2012년 2/4분기에는 -1%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출증가세도 다시 둔화되어 2012년 2/4분기에는 -1.6% 감소로 반전되었다. 금융위기의 영향이 수출 및 제조업에 집중되고 소비 및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작게 영향 받음에 따라 고용시장의 조정도 크지 않았다. 물가는 금융위기 이후 하향 안정되었으나, 정책금리 정상화가 지연되며 2011년에는 다시 높아졌다가, 최근에는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세도 진정되는 모습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0년 2/4분기를 시작으로 다시 성장 속도가 느려졌으며 2012년 들어서는 7-8%대로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경제를 견인하는 3대 마차 중 수출이 큰 영향을 받았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위안화 평가 절상 등 대내외 원인으로 2011년 4/4분기부터 수출증가세가 10%대로 둔화되었으며, 2012년 2/4분기에도 수출증가율은 10.5%에 그쳤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수출입 구조에는 변화가 생겨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였다(2012년 2/4분기 제외). 글로벌 불균형 시정 요구 및 경제성장률에 대한 수출의존도 감소 필요성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고정자산투자는 빠르

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1/4분기 2.7%, 2/4분기 3.9%로 소비 기여도(각각 6.2%와 4.5%)보다 다소 낮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통화공급 확대정책으로 물가는 2010년 4분기부터 치솟기 시작하여 1년간 고물가가 지속되다가, 2010과 2011년의 긴축통화정책으로 2012년 들어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2008년 4.1%였으며 이후 금융위기로 2009년에는 소폭 상승하여 4.3%에 달했으나 2011년부터는 다시 4.1%로 줄어들었다.

일본경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6%의 실질성장을 기록함으로써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지속된 저성장 기조를 벗어난 듯 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치면서, 장기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각각 -5.5%, 4.5%, -0.8%였다. 2008년 2사분기부터 가시화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엔고가 겹치면서 전례 없는 수출급감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기업부문의 생산 및 설비투자 급감, 고용악화를 통해 가계부문의 소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말 이러한 상황을 디플레이션하의 저성장 경제로 규정한 바 있다.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수출입은 오히려 기업의 설비투자보다 부침이 심한데, 그만큼 일본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와 같은 수출 감소와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경기악화는 고용악화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실업률은 2002년 초 5.3%에서 2007년 말에는 3.8%로까지 떨어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다시 5%대로 진입하였다가 2011년말 현재에는 4.5%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2012년 2월 14일 금융정책 운용 상 목표 물가상승률을 1%로 설정한다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였다. 일본은행(BOJ)은 이와 같은 목표를 중장기 물가안정 목표(Price Stability Goal)로 명명하고 있으나, 2012년 상반기 중에도 월별 소비자물

가 상승률이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1%에 미치지 못하는 -0.4~0.5% 수준에 머물고 있어 디플레이션 해소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sup>30)</sup>.

## 나. 산업 및 수출입 구조

한중일 모두 1995년 이후 각국의 부가가치 형성에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한편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2차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이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국내 부가가치 형성에 있어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약 70%로, 일본의 서비스업 비중인 80% 중반보다 크게 낮아 증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가 크게 없으므로 보아 현재 비중이 일종의 정상상태(Steady State)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1차 산업의 비중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5년간 한일에 비해서 산업 구조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발생하였으나 여전히 1차 산업의 비중은 10%를 상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도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은 아직 산업화가 진행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1차 산업의 감소와 서비스업의 증가가 큰 규모로 진행되는 산업 구조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산업의 GDP 비중을 한국은행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1차

30) 그간 일본은행은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 이하의 플러스 영역으로, 중심은 1% 정도”로 제시함으로써 표현이 애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일반적으로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내에 목표물가상승률을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inflation target(BOE)과, 장기적 목표로서 제시하는 inflation goal(FRB)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일본은행이 도입한 물가안정목표제는 목표 달성기간과 실패 시 대응책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미국 FRB가 채택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와 흡사하다는 평가이다. 日本經濟新聞, 2012.3.13일자 참조.

산업 비중이 2000년 4.6%에서 2011년 2.7%로 감소하였고, 제조업 비중은 2000년 28.6%에서 2007년 27.5%로 감소하다 2011년 31.4%로 증가하였다. 한편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건설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0년 66.7%에서 2007년 69.1%로 증가하다 2011년 66%로 감소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이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이다. 한국의 수출액을 무역협회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2000년 1천 7백억불 수준에서 2011년 56백 억불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수입액 또한 2000년 1천 6백억불 수준에서 2011년 5천 2백억불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수출국가 중 중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중·대일 교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5년간 중간재의 수출입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1차 산업 및 서비스업 교역에서의 중간재 비중은 대체로 감소하였다. 중국 또는 일본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 분야 수출 및 수입에서 중간재 비율은 1995년 각각 17%와 16%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30%와 48%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보아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3차 산업은 낙후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 산업 부가가치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15.1%에서 2011년에는 10.0%로 하락하였다. 2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의 45.9%에서 2006년에는 47.9%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다소 줄어들어 2011년에는 46.6%를 차지하였다. 3차 산업의 비중은 2005년 39.0%에서 43.3%로 1차 산업 비중의 하락을 상쇄시키고 있다. 세부산업으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임업, 목축업, 어업을 포함)의 비중이 10.3%로 가장 컸고, 도매업(7.1%)과 건설업(6.6%)이 그 뒤를 따랐다. 제조업 중에서는 기초금속(5.2%)과 전기전자(4.7%), 식료품(3.8%)의 비중이

높았다. 산업별 수출입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의 수출은 주로 전기·전자, 섬유산업, 기계류 등 제조업에 집중되었다. 수입 역시 전기·전자, 고무·플라스틱, 기계류 등의 제조업에 집중되었으며, 광업에 대한 수입이 2009년 기준 16.0%로 전기·전자(27.8%)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교역구조는 아직 한국이나 일본 등의 나라로부터 부품·소재를 공급받은 후 자국의 낮은 생산원가를 활용하여 이를 가공 또는 조립한 후 미국, 유럽 등 제3국으로 최종재를 수출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부품·소재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일본은 1973년 1차 오일쇼크 이전까지 연평균 10%를 초과하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농림·어업의 쇠퇴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융성을 경험하였다. 그 이후에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감소하여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었다. 2009년 일본의 각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전체 4조 9,102억 달러 가운데 농림·어업 1.3%, 광업 0.1%, 제조업 18.0%, 건설 6.2%, 서비스업 74.4%이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근 15년 동안 제조업 비중은 4.6% 포인트 줄고, 서비스업 비중은 무려 7.2% 포인트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1995년과 비교하여 제조업 중에서는 식료품과 운송장비의 비중이 다소 늘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소매업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IT발달과 고령화를 배경으로 사업서비스나 보건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의 산업별 무역구조에서는 ‘자원빈국, 제조업강국’으로서, 원유나 원자재 등 원료를 수입하여 고부가가치의 제조업 제품을 가공·수출하는 일본의 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1995년 이후 일본의 전체 수출액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압도적이며, 전체 수입액 중에서 광업부문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일본의 제조업 수출은, 부품·소재분야와 전기·전자, 자동차, 일반기계·정밀기계·공작기계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반영하여, 전기·전자(제조업 수

출액의 26.6%), 운송장비(26.5%), 기초금속(15.1%), 기계류(11.8%)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단, 199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진행된 디지털화와 모듈화 영향으로, 고도의 숙련기술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일본의 전기·전자제품과 기계류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서비스업은 2009년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14.2%와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은 주로 도매업(서비스업 수출액의 41.5%)와 수상운송(22.0%)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수입은 사업서비스(30.1%), 수상운송(23.7%), 항공운송(14.6%), 도매업(10.7%)으로 비교적 분산되어 있다.

## 2. 경제현황

### 가. 성장 잠재력 확충

한국과 일본은 경제성장을 저하에 직면하고 있다. 양국 모두 고령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하락이 문제이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점차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인구 고령화 등으로 향후에는 성장률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총요소생산성의 개선 속도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이 강화되며 생산성 증가세가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과거와 같이 농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의 이동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기도 어려우며 선진국의 모방을 통한 제도개선 여지도 줄어든 상황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인구고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출산을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중국경제는 2000년대 들어서도 10% 안팎의 고성장을 구가하여 왔으나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며 2012년에는 7-8%대로 성장률

이 하락하였다. 2012년 들어 중국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가장 큰 요인은 장기화된 세계경기 침체로 2011년 하반기부터 국외수요 부진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소비활성화를 위한 가전하향 등 정책에도 소비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대규모 재정자금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던 고정자산투자도 2010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UN의 인구자료에서는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 측면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부문(1차 산업)에서 높은 부문(2차 산업)으로의 노동 이동, 기술 혁신, 구조 개혁 등의 효과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OECD, WB 등 국제기구에서는 2010년을 전후한 중국의 지속 가능한 잠재성장률 수준을 평균적으로 8%대로 추정하였다.

일본경제는 1990년대 초의 버블붕괴에 따른 불량채권 문제를 거의 해소하였음에도 2000년~2009년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은 0.6%로서, 1980년대의 4.4%는 물론 1990년대의 1.5%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일본의 장기적 경제성장률 저하는 1990년대의 버블붕괴나 그 이후의 금융·재정정책의 실패 같은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수요측면에서의 만성적인 수요부족과 공급측면에서의 생산성 하락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일본경제의 유효수요 부족 원인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금융 중개기능의 저하와 디플레이션에 따른 투자의욕 상실, 소비감소를 초래하는 버블붕괴에 따른 자산효과, 그리고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엔고와 같은 일시적 요인 뿐 만 아니라,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었던 만성적 저축초과 현상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노동생산성 하락, 그 중에서도 TFP 증가율의 하락은 장기불황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나.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한중일 모두 재정건전성 악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바뀌면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의 거시경제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과 아울러 단기적으로 잠재성장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운용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충격으로부터 벗어난 2010년 이후에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않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사실상 상회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도 지속되었던 것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 대비 150%를 상회하여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계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들은 아직까지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향후 가계부채의 적절한 관리가 전체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시행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2008년 하반기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크게 인하하고 4조 위안의 대규모 재정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빠르게 경기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이는 과잉 유동성으로 이어져 2009년 4분기부터 다시 플러스로 전환된 물가상승률은 2010년 4분기 4.7%로 급등하였으며, 이러한 고물가는 1년간 지속되었다. 또한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의 증가는 지방 정부의 부채 증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IMF 통계에 따른 중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2011년 기준 26%로 미국 103%, 일본 230%에 비하면 건전한 수준이다. 중국 주택가격은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9년 1월부터 경기부양조치의 효과가 가시

화면서 10%를 넘어섰으며, 2010년 1월과 2월에는 무려 25.0%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0년 4월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주택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되며 안정화 되고 있다. 였고, 2012년 1-3월에는 마이너스 증가를 보였다.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한 중국 정부가 2012년 6월과 7월에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유동성을 약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2012년 7월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6.8% 상승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일본경제는 1990년대 버블붕괴를 계기로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의 저축초과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에 커다란 변화는 없다. 이러한 저축초과 현상은 거시경제의 안정성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일본의 장기불황이 결국은 디플레이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로서는 그렇게 환영할만한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의 저축초과는 소비감소, 기업의 신규투자 회피, 고용축소, 소비감소라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가계부채는 2000년 말 약 413조 엔에서 2011년 말에는 약 368조 엔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이를 GDP 대비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더라도 2000년 말 81.2%에서 2011년 말에는 78.6%로 감소하였다. 거시경제 안정성 관점에서 일본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불안이다. OECD는 2012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19.1%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 포르투갈보다 높은 수준이고 독일, 프랑스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극단적인 재정과탄을 모면할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저금리 기조에 있다. 1985년만 하더라도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7.2%였으나 2005년에는 1.4%로까지 내려갔고, 2012년 9월 현재는 1%도 채 안 된다. 일본 정부로서는 고금리의 국채를 저금리 국채로 열

마든지 차환할 수 있었고, 국채이자부담액도 2000년까지 연간 10조엔 정도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7조~8조 엔대로 낮아지는 저금리 혜택을 누렸다. 일본이 그리스나 포르투갈에 비해 국채비용은 높지만, 순이자부담이 낮은 것은 이와 같은 저금리 혜택을 보여주고 있다.

#### 다. 시장경쟁 환경

한국과 일본 모두 제조업 내 시장집중도가 높으며, 독과점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국유기업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경제는 최근 국내 경제의 많은 산업 또는 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 간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 경쟁의 부족은 기존 독과점 사업자들의 경쟁제한적 행태의 확산, 즉 경쟁질서의 퇴조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정유, 설탕, 커피, 항공 등 다양한 독과점 산업에서 사업자들 간 담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또한 독과점 구조가 이미 형성된 산업에서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시장 경쟁의 부족 또는 퇴조는 일차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후생을 잠식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내 독과점구조 고착화 산업을 보면 해외개방도 및 연구개발 투자비용이 이미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독과점 산업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이 대외적 경쟁압력을 덜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혁신을 통한 경쟁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비효율과 부패의 대명사로 꼽힌다. 개혁·개방 이전 80%를 웃돌던 중국 국유기업의 비중은 이후 몇 번의 개혁을 통해 40%대까지 그 비중이 낮아졌다. 하지만 국유기업은

미국유기업에 비해 부가가치 및 이윤 증가율이 낮은 등 국유기업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국유기업이 중국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큰데 2011년 말 미국 capital trade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국민경제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민영기업은 41%에 달했다. 또한 2012 포춘 글로벌 500기업에 포함된 중국기업이 73개인데, 거의 모두 국유기업이다. 중국 내 주요 매출기업은 국영기업에 몰려 있는데 중국기업연합회와 중국기업가협회가 발표한 중국 내 500대 기업에 따르면 2011년 시노펙(중국석유화학)이 2조 5,500억 위안의 매출을 올려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석유천연가스, 중국국가전망, 공상은행, 건설은행, 이동통신 등이 뒤를 이었다. 매출 1000억 위안을 올린 기업 가운데 민영기업은 15개에 불과해 2010년의 6개 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소수에 그치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들은 정부 주도하의 구조조정으로 M&A를 통해 부지런히 덩치를 키우고 있다. 2011년 154개 대기업이 1,111개 기업을 인수합병한 데 이어, 2012년에도 중국 500대 기업 중 154개 기업이 M&A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중에서도 중국 국유기업들의 M&A 움직임이 활발했다. 중국 대부분의 국유기업은 부동산개발 관련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개발 자회사들은 중국의 부동산 버블을 형성하는 데 일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중국 정부는 현 SASAC 체제를 SAMC(국유자산관리공사) 체제로 전환하고 국유기업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비유통주를 축소하며, 국유기업 이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대상을 확대하며, 국유자본 경영예산을 국가예산에 편입시켜 사회공공지출에 투입하는 등을 방향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경제에서 제조업 부문의 시장경쟁 실태를 보여주는 시장집중도 지수의 추이를 생산량 기준의 CR3과 허핀달지수(HHI)를 통해 살펴보면 일본 제조업은 2002년 시점에서만 보더라도 CR3

73.6%, HHI 2959.8로서 매우 시장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10년에는 CR3 79.4%, HHI 3121.5과 같이 이러한 독과점 현상이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1950년~1960년대의 시장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을 배경으로 형성된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독과점 시장구조가 매우 확고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도 대외개방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일본 제조업의 이러한 시장경쟁 부족 또는 퇴조는 국내 소비자의 후생감소 뿐만 아니라 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완전경쟁이 아닌 독과점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내외적 경쟁압력에 덜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혁신을 통한 경쟁 인센티브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일본경제에서 보건, 의료, 간병, 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과 농업은 제조업보다 시장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성과 성장잠재력을 크게 상실하고 있는 분야로 지적되고 있다.(Kawai and Morgan, 2012, p.17) 특히, 일본의 서비스산업은 전체 GDP와 고용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진입 및 퇴출 규제 등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라. 복지

한중일 삼국 모두 사회보장의 필요성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의 문제가 크고, 한국과 중국의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삼국 모두 복지 수준은 높지 않다. 일본도 수혜율이 낮은 저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도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되지 않은 사례로 꼽혀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빈곤심화와 소득분배악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절대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회복지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노력은 그간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제도와 프로그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effective) 보호범위가 좁고 수혜율이 낮아 복지사각지대가 넓은 것은 한국 복지제도의 특성이자 한계이다.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구가 약 410만명 수준이며 취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70%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여 자립을 돕는 한편, 다가오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출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복지부문의 큰 과제이다.

개혁·개방 이후의 30여 년간 중국경제는 연평균 10%대의 고속 성장을 구가하였으나, 동시에 사회구성원 간 소득격차 또한 크게 확대되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에서 소득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의 하나다. 중국의 소득격차는 보통 도농 간 소득격차, 도시 간 소득격차 및 농촌 간 소득격차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그중 도농 간 소득격차는 중국의 소득불균형 심화를 초래한 가장 큰 부분이다. 도시 내부 소득격차를 줄이고 동시에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0년부터 임금인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연평균 13%씩 인상하여 2010년의 2배에 이르게 하고, 대부분 지역의 최저임금이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가 되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이후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사회보험법과 같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들을 잇달아 시행하며 노동법률 환경을 친노동자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소득분배 개선과 무관하지는 않다.

일본의 사회보장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관련 정부지출이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둘째, 일본정부의 사회보장관련 지출은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자관련 지출비중이 매우 높아 저출산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셋째, 고령자에 대한 국가부담은 높지만 실제 고령자 1인당 연금수급액은 그다지 높지 않아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가 수혜율은 낮은 저복지라는 점이다. 일본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사회보장과 세제의 통합개혁안은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고, 사회보장 시스템도 강화하겠다는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었다. 이러한 통합개혁안은 2012년 8월 국회에서 8개 법안이 최종 통과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에서 지적한 바 있는 소비세 인상 계획을 제외하고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내각 산하에 설치될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가 1년에 걸쳐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개혁방향을 유보한 상태이다.







##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한중일 삼국의 경제현안을 전망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시점을 기점으로 삼국의 국내 경제여건 및 현안, 정책동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중일 삼국의 국내 경제여건을 거시경제 측면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비교하였고, 삼국의 현안과 정책동향을 성장률·거시경제 안정성·시장경쟁·복지의 네 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거시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2008년 금융위기의 일차적인 충격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벗어났으나, 유럽과 미국 등의 부채문제로 인한 세계경제 회복 지연으로 정상화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산업구조 측면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 수출 및 수입액 모두 비약적 증대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국가로는 중국의 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현안 및 정책동향을 보면, 우선 성장 잠재력 확충 부문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 및 하락속도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또한 총요소생산성의 개선속도도 둔화되고 있다. 거시경제 안정성 측면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시장경쟁 환경은 다수의 산업 및 시장에서 독과점구조의 고착화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 측면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빈곤 심화 및 소득분배악화 현상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거시경제 여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회복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 2/4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며 2012년 들어 7-8% 대로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산업구조 측면은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3차 산업은 낙후되어 있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현재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 중이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등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가공을 거쳐 미국·EU 등으로 최종재를 수출하는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부품 및 소재산업이 발달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경제 현안 및 정책동향을 살펴보면 성장 잠재력 확충 부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기인한 수출악화로 인해 성장률이 급감하였다. 거시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과감한 재정 및 통화정책의 도입으로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기회복을 가져왔으나, 이후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국유기업 중심의 투자 증가로 지방정부의 부채가 증가하였고, 부동산가격 상승이 초래되었다. 시장경쟁 환경은 비효율과 부패의 대명사인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으나, 여전히 국유기업의 부가가치 및 이윤 증가율이 낮다. 복지 측면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고속성장으로 인해 사회구성원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었고, 최근 노동법 개선을 통해 친노동자 방향으로 노동과 법률 환경을 전환하고 있다.

일본의 거시 경제여건은 여전히 경기의 침체 국면에 빠져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엔고 현상이 맞물리며 수출이 급감하고, 이로 인해 기업투자가 급감하며 고용이 악화되고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악재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구조 측면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원료를 수입하여 고부가가치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는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디지털화, 모듈화로 인하여 전기전자 및 기계류 산업의 주력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현안 및 정책동향을 살펴보면 성장 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장기적 경제성장률 저하

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만성적인 수요부족, 공급측면의 생산성 하락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노동생산성 하락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하락이 장기불황의 근본원인이다.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정불안이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그리스, 포르투갈보다 높은 수준이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재정파탄을 모면 중이다. 시장경쟁 환경은 제조업 내 시장집중도가 높으며,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독과점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복지측면에서는 사회보장관련 정부지출의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사회보장관련 지출 중 고령자관련 지출비중이 높아 저출산 대책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실제 고령자 1인당 연금 수급액은 낮은 저복지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한중일 경제여건 비교 분석하면 한중일 모두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2012년 2/4분기에 2.4%까지 성장률이 하락한 상황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위안화 평가 절상 등 대내외 원인으로 2011년 4/4분기부터 수출증가세가 10%대로 둔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률도 하락하였다. 일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대지진·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치면서 장기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한중일 삼국의 산업 및 수출입 구조를 살펴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현상은 삼국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업 비중은 각각 70%와 80% 중반을 기록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1차 산업의 비중이 10% 상회해 한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수출에서 제조업 중간재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한국의 제조업 수출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과 2009년 각각 중국은 17%에서 30%로, 일본은

16%와 48%로 증가하였다.

한중일 경제현안 및 정책동향을 비교 분석하면 우선 일본과 한국은 경제성장률 저하에 직면하고 있다. 양 국 모두 고령화와 중요소생산성 증가율하락이 문제이다.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는 한중일 삼국 모두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현재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지만 저금리 기조가 바뀌면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 시장경쟁 환경은 중국은 국유기업 독과점의 문제가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모두 제조업 내 시장집중도가 높으며, 독과점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복지 측면에서 한중일 삼국 모두 사회보장의 필요성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의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삼국 모두 복지 수준은 높지 않고, 일본도 수혜율이 낮은 저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 참고문헌

### [국문문헌]

- 공정거래위원회(2012)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현황 정보공개', 보도자료.
- 배기환(2011), 「중국의 중진국 함정 논란과 시사점」, 국제경제정보 제2011-34호, 한국은행.
- 배상인(2012), 「중국경제 8%대 성장의 의미와 정책전망」, 국제경제정보 제2012-13호, 한국은행.
- 이재형(2010, 2011), 「시장구조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은행(201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8월.
- 한우덕(2012), 『우리가 아는 중국은 없다』, 청림출판사.
- 한진희·신석하(2008),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성장회계 및 성장회귀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30권 제1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영문문헌]

- Fortune(2012), “Global 500”.
- IMF, 2012, *IMF Country Report: Japan*, NO.12/209. August 2012.
- Kawai Masahiro and Peter J.Morgan, 2012, "Japan's Post-Triple-Disaster Growth Strategy", *ADB Working Paper Series No.376*, August 2012.
- OECD, 2011a, *Statistics from A to Z*. Paris:OECD.
- \_\_\_\_\_, 2011b, *Pensions at a Glance 2011*. Paris:OECD.
- \_\_\_\_\_, 2012, *Economic Outlook 91 database*, May 2012.

The World Bank and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2012), "China 2030".

[중문문헌]

- 國家統計局(2012), 『中國統計摘要2012』, 中國統計出版社.
- 國務院(2012), 「國務院關於2012年深化經濟體制改革重點工作的意見」, 2012.3.
- 國務院(2010), 「國務院關於堅決遏制部分城市房價過快上漲的通知」, 2010.4.
- 李善同·何建基(2010), 「基於DRCGE模型的2030年中國經濟增長的前景展望」, 2010.3.
- 商務部·發展改革委·財政部·人民銀行·海關總署·稅務總局·質檢總局·銀監會·保監會·外匯局(2012), 「關於加快轉變外貿發展方式的指導意見」. 2012.2.
- 王一鳴(2012), 「未來中國經濟發展趨勢和中韓關係」, 한중 수교 20주년 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 서울, 2012.4.
- 中國企業聯合會·中國企業家協會(2012), 「中國企業500強」.  
(2011), 「中國企業500強」.  
(2010), 「中國企業500強」.  
(2009), 「中國企業500強」.
- 中國商務部·國家統計局·國家外匯管理局(2011), 「2010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일문문헌]

- 金榮慤·深尾京司·牧野達治, 2010, 「失われた20年の構造的要因」, 『RIETI Policy Discussion Paper Series』 10-P-004, 經濟産業研究所.
- 內閣官房, 2012, 「社會保障·稅一体改革に關連する國會提出法案等」 2012.7.15. (<http://www.cas.go.jp/jp/seisaku/syakaihosyou/houan.html> : 2012.9.5일 검색)

内閣府, 2009, 「日本經濟2009-2010の概要—デフレ下の景氣持ち直し: 「低水準」經濟の總点檢一」

(<http://www5cao.go.jp/keizai3/2009/121lnk/09youyakupdf>, 2009.12. 2012.9.10 일 검색)

\_\_\_\_\_, 『國民經濟計算(GDP統計)』

(<http://www.esri.cao.go.jp/jp/sna/menu.html>:2012.9.15일 검색)

西澤和彦, 2011, 『稅と社會保障の抜本改革』, 日本經濟新聞社

野村彰宏, 2009, 「GDPギャップの概念について」, 『ESP』, 2009年夏号.

日本銀行, 『資金循環』

(<http://www.boj.or.jp/statistics/sj/index.htm> : 2012.9.6일 검색)

日本總研, 2012a, 「わが國貿易收支の中期展望」, 2012.3.26.

\_\_\_\_\_, 2012b, 「社會保障・稅一体改革3党合意の評価と課題: 稅・社會保障改革シリーズ①」 『政策觀測』 No.41, 2012.6.21.

森川正之, 2009, 『サービス産業の生産性分析:政策的視点からのサーベイ』, 日本銀行ワーキングペーパーNo.09-J-12, 2009年12月.

總務省統計局, 『物価に關する統計』

(<http://www.stat.go.jp/data/guide/1.htm>:2012.9.5일 검색)

\_\_\_\_\_, 『勞働力調査』

(<http://www.stat.go.jp/data/guide/1.htm>:2012.9.5일 검색)

八代尚宏, 2008, 『經濟成長に果たす競争政策と規制改革の役割』, CRPC Discussion Paper Series No.32, 公正取引委員會競争政策研究センター, 2008年5月.

# Abstract

In comparing th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economic conditions all three nations have not been freed the aftermath of financial crisis. Korea's export growth which significantly depends on China has slowed down and has depreciated to 2.4% in the second quarter of year 2012. China's economic growth rate has also been dropped as export growth slowed down to the 10% range since the fourth quarter of year 2011 due to diverse causes at home and abroad including the slow economic recovery of developed economies such a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ncreased production cost caused by inflation and increased labor costs, and revaluation of Chinese currency. In the case of Japan,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he following Fukushima nuclear accident a long-term economic recession continues.

The examination of import and export trade structure of Korea, China, and Japan reveals that the acceler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is commonly shared by all three nations. The service industry in the Korean and Japanese economy records a mid weight of 70% and 80% respectively, and in the case of China, the weight of primary industries exceeds 10%, which is higher than Korea and Japan. The weight of Korean and Japanese export trades to China are expanding. The weight of manufacturing sector's intermediary goods are expanding in Korea's exports, and the weight of intermediary goods in import and export trade in manufacturing industry in China and Japan between 1995 and 2009 increased from 17% to 30%, and 16% and 48%, respectively.

A comparative analysis of economic issues and policy trends in Korea, China, and Japan, first, Japan and Korea shows an economic slowdown in all three countries. Both Korea and Japan share a common problem of aging population and growth declin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terms of reinforcing macroeconomic stability, all three countries, Korea, China and Japan, holds concerns of deterioration of fiscal sustainability. Although it is not currently recognized as a major issue, higher interest rate could magnify the problem. In terms of market competition conditions, China carries the problem of monopoly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both in Korea and Japan manufacturing industries possess high market concentration, and monopoly phenomenon is expanding. In terms of public welfare the necessity of social security is increasing in all three countries. Both Korea and Japan is facing the problem of aging population whereas in Korea and China the issue of income distribution is deteriorating. In all three countries the level of welfare is not high, and Japan also has weak welfare system with low reception rate.